

부여군 재정진단 및 세출효율화를 위한 연구

2024. 2.



부여군

제 출 문

부여군수 귀하

본 보고서를 「부여군 재정진단 및 세출효율화를 위한 연구」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4. 2.

충남연구원 원장 유 동 훈

목차

목차

contents

제1장 연구의 개요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3

- 1. 연구의 배경3
- 2. 연구의 목적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6

- 1. 연구의 범위6
- 2. 과업 수행방법7

제2장 부여군 지역 여건 및 재정 현황 9

제1절 부여군 지역 여건11

- 1. 부여군 일반 현황11
- 2. 부여군 경제 현황16

제2절 부여군 재정 현황19

- 1. 예산 규모19
- 2. 재정여건21
- 3. 행사축제경비 및 지방보조금 편성 현황23

제3장 부여군 재정 진단 27

제1절 진단 개요29

- 1. 진단 목적29
- 2. 진단 대상29
- 3. 진단 내용34
- 4. 진단 방법34

제2절 지방보조사업예산 운영 분석	35
1. 지방보조사업 예산 운영기준	35
2. 부여군 지방보조금 평가 체계	38
3. 부여군 지방보조금 주요 현황	48
4. 부여군 지방보조금 개선과제	55
제3절 순군비사업예산 운영 분석	59
1. 주요 재정사업 평가제도	59
2. 순군비사업 예산 분석	63
3. 순군비사업 지출 개선과제	72
제4절 국도비사업예산 운영 분석	75
1. 지방재정영향평가 제도 운영 현황	75
2. 국도비 예산 분석	79
3. 국도비사업 지출 개선과제	90
 제4장 부여군 세출효율화 방안	 93
제1절 기본 방향	95
제2절 지방보조금 효율화 방안	98
1. 사전심사 개선방안	98
2. 사후 성과평가 개선방안	101
3. 행사성 보조사업 관리 강화	102
제3절 순군비사업 지출 효율화 방안	104
1. 주요 재정사업평가 활성화	104
2. 통계목 적합성 평가 및 조정	106
3. 총액한도제 운영	107
4. 자부담 적용	108
5. 시설비 지출 효율화 방안	108
제4절 국도비사업 지출 효율화 방안	110

제5장 정책 제언	113
1. 지방보조사업 관리에 관한 제언	115
2. 순군비사업예산 관리에 관한 제언	116
3. 국·도비사업예산 관리에 관한 제언	117

표목차

[표 2-1] 부여군 행정구역 현황	11
[표 2-1] 부여군 인구현황(내국인+외국인)	12
[표 2-1] 부여군 읍면별 인구(2021년 기준)	13
[표 2-2] 부여군 연령별 인구 변화 추이(내국인)	14
[표 2-3] 부여군 장래인구추계(2025~2040, 5개년 단위)	15
[표 2-4] 충청남도 시군별 지역내총생산(GRDP)	17
[표 2-5] 2021년 기준 부여군 산업구성표	18
[표 5-1] 부여군 2023년도 예산 규모	19
[표 5-2] 부여군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19
[표 5-3] 부여군 세입재원별 연도별 예산구조(일반회계)	20
[표 5-4] 부여군 세출분야별 연도별 예산 구조(일반회계)	21
[표 2-6] 2023년 부여군 재정자립도	22
[표 2-7] 부여군 재정자립도 추이(2019년~2023년)	22
[표 2-8] 2023년 부여군 재정자주도	22
[표 2-9] 부여군 재정자주도 추이(2019년~2023년)	23
[표 2-1] 부여군 중기지방재정계획(2023-2027)의 재원별 재정전망	23
[표 2-10] 2023년 부여군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24
[표 2-11] 부여군 연도별 행사축제경비 현황(2019년~2023년)	24
[표 2-12] 2023년 부여군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25
[표 2-13] 부여군 연도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2019년~2023년)	26
[표 3-1] 지방보조사업 통계목	30
[표 3-2] 행사성 사업 예산 통계목	31
[표 3-3] 현금성 사업 예산 통계목	31
[표 3-4] 시설비 사업 예산 통계목	32
[표 3-5] 부여군 지방보조사업 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서	40
[표 3-6] 부여군 지방보조금 신청사업 평가표	41
[표 3-7] 부여군 지방보조금 신청 사업별 자체심사 결과표	42
[표 3-8]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상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기준(예시)	44
[표 3-9] 부여군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 시기 및 방법	45
[표 3-10] 부여군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표	47
[표 3-11] 부여군 지방보조사업 유형별 현황(2023년 4회추경예산 기준)	48

[표 3-12] 부여군 지방보조사업 부서별 현황(2023년 4회추경예산 기준)	49
[표 3-13] 부여군 지방보조사업 유형별, 부서별 교차분석(2023년 4회 추경예산 기준)	51
[표 3-14] 부여군 지방보조사업 유형별 성과평가결과(2022년)	55
[표 3-15] 부여군 지방보조사업 연도별 성과평가결과	55
[표 3-16] 주요재정사업평가 실국(실과)별 상대평가 적용 기준표	61
[표 3-17] 부여군 행사성사업 예산 현황(2023년 4회 추경예산 기준)	63
[표 3-18] 부여군 현금성사업 예산 현황(2023년 4회 추경예산 기준)	65
[표 3-19] 부여군 시설비사업 현황(2023년 4회 추경예산 기준)	67
[표 3-20] 부여군 연도별 대규모 시설비사업 목록(10억원 이상)	69
[표 3-21] 유지보수성격 시설비사업 현황(2023년 4회 추경예산 기준)	72
[표 3-22]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영향평가 자체평가 기준	78
[표 3-23] 부여군 국도비사업 예산 현황(2023년 4회 추경예산 기준)	80
[표 3-24] 부여군 국비사업 예산 현황(2023년 4회 추경예산 기준)	82
[표 3-25] 부여군 균특회계사업 예산 현황(2023년 4회 추경예산 기준)	83
[표 3-26] 부여군 도비사업 예산 현황(2023년 4회 추경예산 기준)	84
[표 3-27] 부여군 국도비사업 군비 부담 현황(2023년 4회 추경예산 기준) ..	86
[표 3-28] 부여군 보조사업 유형별 군비부담 현황(2023년 4회 추경예산 기준) ..	87
[표 4-1] 지방보조사업 신청사업 평가기준 수정안	100
[표 4-2] 주요 재정사업평가 사전심사 수정안	105

그림목차

[그림 2-1] 부여군 행정구역 현황	12
[그림 2-2] 충청남도 전체시군 2020-2040 인구증감비교 (2020현재인구-2040추계인구)	15
[그림 2-3] 충청남도 부여군 장래인구추계 (2025~2040년, 5개년단위 3개그룹)	16
[그림 2-4] 부여군과 동일유형 자치단체 간 행사축제경비 비교	25
[그림 2-5] 부여군과 동일유형 자치단체 간 지방보조금 비교	26
[그림 3-1] 재정진단 대상 구분	29
[그림 3-2] 부여군 지방보조금 사전심사체계	38
[그림 3-3] 부여군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체계	45
[그림 3-4] 부여군 지방보조사업 예산액 및 사업수 추이	52
[그림 3-5] 부여군 지방보조사업 유형별 · 연도별 예산액	53
[그림 3-6] 부여군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2022년)	54
[그림 3-7] 부여군 지방보조금 사전 평가체계(기존 방식)	56
[그림 3-8] 부여군 행사성사업의 연도별 예산액	64
[그림 3-9] 부여군 행사성사업의 연도별 예산액(2023년 4회 추경예산 기준)	65
[그림 3-10] 부여군 시설비 사업의 연도별 예산액	68
[그림 3-11] 재정사업의 추진 절차상 지방재정영향평가 순서	75
[그림 3-12] 부여군 국도비사업의 군비부담 추이	88
[그림 3-13] 부여군 국도비사업의 군비부담 추이	89
[그림 3-14] 부여군 공모사업 추이	90
[그림 4-1] 부여군 세출 효율화 방향	97
[그림 4-2] 부여군 지방보조사업 사전 평가체계 수정(안)	99
[그림 4-3] 부여군 지방보조금 성과평가체계 수정(안)	101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과업의 범위 및 수행방법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중앙정부의 긴축재정 운영기조로 인해 국세가 감소함에 따라 이전재원이 급감하고, 지방세 감소까지 발생

- 기획재정부는 9월 18일에 발표한 ‘2023년 국세 재추계 결과’에서 2023년 국세 수입은 예산액보다 59.1조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 세입예산액이 당초 400.5조원에서 341.4조원으로 59.1조원 감소한다고 발표함
- 그로 인해 국세의 19.23%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부세의 감소는 불가피
- 연구결과에 의하면, 보통교부세가 9.9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나라살림연구소, 2023)¹⁾
- 또한, 중앙정부의 감세정책 기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개편되어 부동산교부세와 재산세가 감소함²⁾
- 부동산교부세는 국세 재추계 결과 1조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나라살림연구소, 2023)

■ 중앙정부의 긴축재정 운영 기조 지속

- 이러한 정부의 재정압박은 2024년에도 지속될 전망
- 2023년 8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 국세수입 예산안’ 자료에 의하면, 2024년 국세수입은 367.4조원으로 2023년 400.5조원에서 33.1조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부여군은 세입감소에 대응하면서, 차년도 예산 절감 및 재정효율화 노력 추진

- 부여군은 대규모 세입감소에 따라 재정안정화기금을 전입하여 활용함

1) 나라살림연구소, [나라살림 337호] 브리핑 세수재추계 기준지자체 보통교부세 감소액 추정. 2023

2)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 완화, 재산세는 공시가격 대폭 인하(공동주택 18.6%)와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일부 인하(나라살림연구소, 2023)

- 2024년도 예산편성시 예산절감을 위한 임시 기준을 마련하여 예산을 대대적으로 축소함
- 신규사업 추진 또는 확장보다는 기존 계획의 완성도를 제고하도록 함
- 대규모사업 추진시 수익성을 판단하도록 하고 타당성 재검토 기구 운영을 검토하는 등 재정효율화 노력을 추진함

■ 부여군의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 필요

- 부여군의 세입은 2017년에 7,682억원(일반회계 결산 기준)에서 2021년 9,168억원(일반회계 결산 기준)으로 연평균 4.5% 증가함
- 중앙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및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
-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줄이고, 다양한 정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합리적인 재정운용 방향을 수립해야 함
- 이러한 재정운용을 통해 미래세대에 대해 책임성을 높여야 함

2. 연구의 목적

■ 효율적 재정운용 및 재정 효율성 확보

- 부여군의 주요 세출분야에 대한 재정분석·진단을 실시하여 세출 효율화 방안 모색
-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 등 다양한 정책 수요에 대응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용 방향 수립 및 내실있는 재정운용 기준 제시

■ 보조사업 성과 분석 및 조정방안 마련

- 지방보조금 사업은 해마다 증가하여 재정부담 요인으로 작용
- 지방보조금 사업의 운영체계, 사업성과 등을 분석하여 필요성, 유사·중복 여부, 자부담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조정방안 마련

■ 부여군의 순군비 사업에 대한 예산조정 기준 마련

- 행사·축제성 경비 등으로 활용되는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기타보상

비 등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후 효율화 방안 마련

- 추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자체 복지사업에 해당하는 사회보장적수혜금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효율화 방안 제시

■ 부여군의 국·도비지출 개선방안 제시

- 부여군 세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조사업 운영현황을 분석한 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방안 마련
- 국비사업, 군특회계사업, 도비사업으로 구분하여 운용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제도 현황을 검토한 후 부여군의 세출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 제시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1. 연구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는 2024년(예산편성 연도)
- 검토대상 기간은 민선 7기 이후인 2019년부터 2023년까지

■ 대상적 범위

- 부여군 지방보조금 중 민간보조사업 예산
 - 지방보조금은 공공단체 보조와 민간 보조로 구분되는데, 공공단체 보조는 자치단체, 공기관,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금을 의미하고, 민간 보조는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 대한 보조금을 의미함
 - 공공단체 보조금에는 자치단체 경상·자본보조, 예비군육성지원 경상·자본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고, 민간 보조금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가 있음
 - 연구의 실효성을 위해 공공단체보조는 제외하고 민간보조만을 대상으로 함
- 부여군 국·도비(공모) 사업
- 행사·축제성 경비와 자체 복지사업 관련 순군비 예산 항목
 - 2023년 제2회 추경 기준 사업예산의 사업들 중 예산과목이 기타보상금, 행사실비지원금, 행사운영비, 사회보장적수혜금
- 부여군 예산 중 큰 규모의 자본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비

■ 내용적 범위

- 부여군 지역 및 재정 현황
- 세출효율화 및 지방보조사업 관련 선행연구 검토
- 부여군 재정진단
- 부여군 세출효율화 방안

2. 과업 수행방법

■ 관련 문헌 검토

- 세출효율화 및 민간보조사업 관련 기존 연구문헌 검토
- 예산편성 및 민간보조금 관련 법규 검토

■ 관련 전문가 자문

- 지방재정 전문가 대상 자문회의

■ 예산 편성목별 운영 분석

- 재정운용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해 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실태 분석
- 지방보조금 사업 우수 운영사례를 선정하여 시사점 도출

■ 부여군 사업 및 예산담당자 인터뷰

- 부여군 사업부서 대상 의견조사 실시
- 예산담당자 대상으로 부여군의 전반적인 재정운용 및 지방보조사업 운영 등에 대한 의견조사 실시

제2장

부여군 지역 여건 및 재정 현황

제1절 부여군 지역 여건

제2절 부여군 재정 현황

제1절 부여군 지역 여건

1. 부여군 일반 현황

■ 부여군 행정구역 현황

- 부여군의 전체 면적은 2021년 말 기준으로 624.62km²이며, 읍면별로 살펴보면 은산면, 부여읍, 외산면의 순서로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음

[표 2-1] 부여군 행정구역 현황

(단위 : km², %, 개소)

구분	면적(km ²)	구성비(%)	행정리	반
합계	624.62	100.0	437	1,709
부여읍	59.27	9.5	53	262
규암면	46.32	7.4	36	216
은산면	69.49	11.1	27	107
외산면	56.06	9.0	23	46
내산면	40.50	6.5	24	50
구룡면	21.86	3.5	22	100
홍산면	23.90	3.8	25	105
옥산면	25.37	4.1	20	55
남면	20.98	3.4	25	92
충화면	37.08	5.9	22	61
양화면	32.77	5.2	27	97
임천면	43.11	6.9	33	124
장암면	47.70	7.6	24	116
세도면	41.68	6.7	30	109
석성면	30.60	4.9	22	90
초촌면	27.93	4.5	24	79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kr) 충청남도부여군기본통계



[그림 2-1] 부여군 행정구역 현황

■ 부여군 인구 현황

- 부여군의 인구수는 2021년 기준 64,893명으로 2017년 이래 지속적 감소 추세에 있음
- 세대수는 2021년 기준으로 33,257세대이며, 인구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 세대수는 큰 차이 없이 감소와 증가추세가 반복되고 있음
- 인구밀도는 2021년 기준으로 103.9명/㎢임
- 65세 이상 인구는 2017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 기준 전체 인구의 35.7%를 차지함

[표 2-1] 부여군 인구현황(내국인+외국인)

(단위 : 세대, 명, %)

연도	세대	인구			인구 밀도	면적(㎢)	세대당 인구	65세 이상	
		총계	남성	여성				인구	비율
2017	32,999	69,086	34,259	34,827	110.7	624.62	2.10	21,209	30.7
2018	33,193	69,254	34,338	34,916	110.9	624.62	2.10	21,508	31.1
2019	33,341	67,979	33,711	34,268	108.8	624.62	2.00	22,051	32.4
2020	33,738	66,472	32,969	33,503	106.4	624.62	1.97	21,651	32.6
2021	33,257	64,893	32,242	32,651	103.9	624.62	1.95	23,199	35.7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kr) 충청남도부여군기본통계

■ 부여군 읍면별 인구

- 부여군 내 부여읍에 전체 인구의 30.5%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어 규암면(18.6%), 은산면(5.8%)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2-1] 부여군 읍면별 인구(2021년 기준)

(단위 : 세대, 명, %)

읍면	세대	인구				인구밀도	면적(km ²)
		총계	비율	남	여		
합계	33,257	64,893	100.0	32,242	32,661	103.9	624.62
부여읍	9,641	19,794	30.5	9,802	9,992	334.0	59.27
규암면	5,760	12,079	18.6	5,924	6,155	260.8	46.32
은산면	1,923	3,750	5.8	1,901	1,849	54.0	69.49
외산면	1,324	2,338	3.6	1,146	1,192	41.7	56.06
내산면	839	1,555	2.4	765	790	38.4	40.50
구룡면	1,274	2,420	3.7	1,211	1,209	110.7	21.86
홍산면	1,515	2,890	4.5	1,419	1,471	120.9	23.90
옥산면	799	1,433	2.2	695	738	56.5	25.37
남면	1,010	1,816	2.8	880	936	86.6	20.98
충화면	675	1,142	1.8	577	565	30.8	37.08
양화면	1,010	1,699	2.6	817	882	51.8	32.77
임천면	1,594	2,931	4.5	1,462	1,469	68.0	43.11
장암면	1,522	2,766	4.3	1,403	1,363	58.0	47.70
세도면	1,730	3,146	4.8	1,588	1,558	75.5	41.68
석성면	1,466	2,979	4.6	1,567	1,412	97.4	30.60
초촌면	1,175	2,155	3.3	1,085	1,070	77.2	27.93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kr) 충청남도부여군기본통계

■ 부여군 연령별 인구 변화

- 부여군의 65세 이상 내국인 고령자 인구는 2017년 30.7%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에 36.4%에 이룸
 - 부여군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 이상을 초과하여 초고령사회 상태에 있고, 그 정도는 계속 심화되고 있음

[표 2-2] 부여군 연령별 인구 변화 추이(내국인)

(단위 :명,%)

연령계급	2017		2018		2019		2020		2021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총계	69,086	100	68,078	100	66,740	100	65,354	100	63,774	100
0-19세	9,288	13.4	8,732	12.8	8,215	12.3	7,598	11.6	7,097	11.1
19-29세	6,276	9.1	6,082	8.9	5,779	8.7	5,425	8.3	5,047	7.9
30-49세	13,830	20.0	13,147	19.3	12,322	18.5	11,606	17.8	10,852	17.0
50-64세	18,483	26.8	18,609	27.3	18,373	27.5	18,042	27.6	17,579	27.6
65세 이상	21,209	30.7	21,508	31.6	22,051	33.0	22,683	34.7	23,199	36.4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kr) 충청남도부여군기본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재구성

- 그에 반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인구는 2017년에 13.4%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1년에 11.1%까지 줄어듦
- 부여군의 청년층 및 지역주민층에 해당하는 19세 이상 인구수는 최근 5년 사이 2개 계층(19-29세, 30-49세)에서 지속적으로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50-64세 계층과 65세 이상 계층에서만 지속적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생산가능인구(19~64세 인구)는 2017년 이후 52%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부여군 장래인구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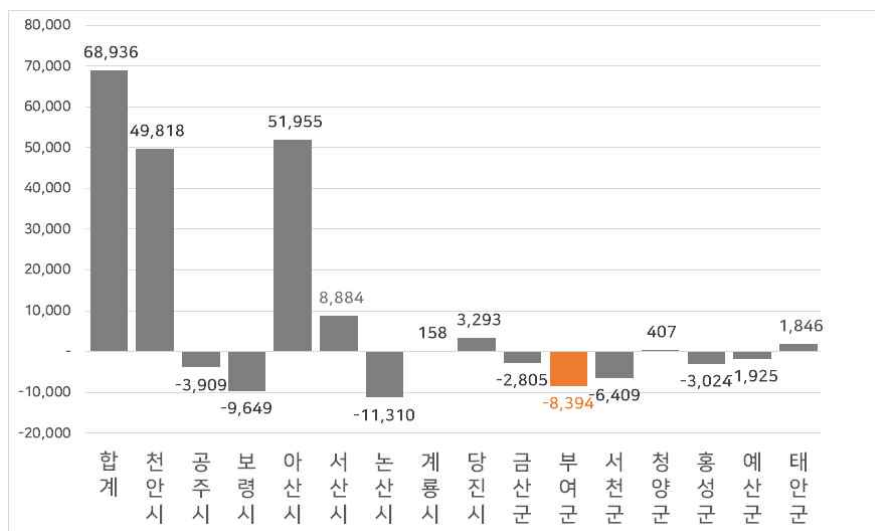
- 충청남도 시군 장래인구추계 데이터에 따르면, 부여군의 인구는 2040년까지 현재 수준에서 감소(8,394명, 추정치)할 것으로 추정되며, 15세-25세의 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의 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20년 기준 인구와 2040년 추계인구를 비교분석한 결과, 충청남도 전체의 인구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부여군의 인구는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충청남도 내 대부분의 시군에서 비슷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음
- 장래인구추계를 3개 그룹(0세~29세, 30세~59세, 60세 이상)으로 나누어 확인한 그림에서도 이와 같은 추세를 확인할 수 있음

[표 2-3] 부여군 장래인구추계(2025~2040, 5개년 단위)

연도	2025	2030	2035	2040
계	60,353	59,101	58,534	58,078
0 - 4세	728	766	854	817
5 - 9세	1,140	792	837	936
10 - 14세	1,782	1,230	866	909
15 - 19세	2,013	1,872	1,337	955
20 - 24세	2,132	1,895	1,833	1,353
25 - 29세	2,051	1,690	1,488	1,476
30 - 34세	2,104	1,843	1,487	1,326
35 - 39세	1,955	2,053	1,873	1,501
40 - 44세	2,608	2,084	2,222	2,071
45 - 49세	3,111	2,847	2,331	2,514
50 - 54세	4,257	3,430	3,251	2,677
55 - 59세	4,930	4,773	3,962	3,857
60 - 64세	6,464	5,616	5,578	4,721
65 - 69세	7,075	6,971	6,288	6,334
70 - 74세	5,421	7,145	7,203	6,652
75 - 79세	4,413	5,171	6,920	7,114
80 - 84세	3,777	3,869	4,617	6,275
85 - 89세	2,750	2,837	3,045	3,701
90 - 94세	1,300	1,617	1,736	1,968
95세 이상	342	600	806	9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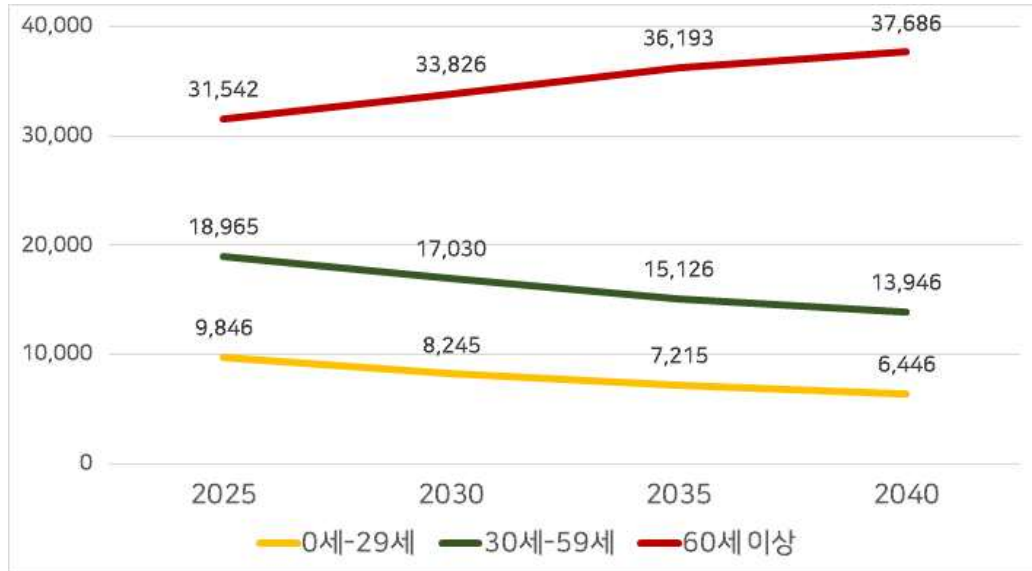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충청남도 장래인구추계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구성

[그림 2-2] 충청남도 전체시군 2020-2040 인구증감비교
(2020현재인구-2040추계인구)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충청남도 장래인구추계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재구성

[그림 2-3] 충청남도 부여군 장래인구추계 (2025~2040년, 5개년단위 3개그룹)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충청남도 장래인구추계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재구성

2. 부여군 경제 현황

■ 부여군 지역내 총생산(GRDP)

- 부여군의 지역내 총생산(GRDP)은 2020년 기준 1조 9,804억원으로 전년도보다 550억원 수준에서 증가함
 - 부여군 GRDP는 2017년에 1조 9,482억원이고, 2018년에 2조 8억원, 2019년에 1조 9,252억원 수준임
- 충청남도 15개 시군 합계에서 부여군의 GRDP가 차지하는 규모는 2020년 기준으로 1.7%에 불과하고 이러한 비율은 2017년 이후 지속됨

[표 2-4] 충청남도 시군별 지역내총생산(GRDP)

(단위 : 백만원, %)

시군	2017		2018		2019		2020	
	GRDP	비율	GRDP	비율	GRDP	비율	GRDP	비율
천안시	26,008,917	22.5	26,165,157	22.6	24,152,775	21.3	26,111,315	22.6
공주시	3,613,380	3.1	3,628,228	3.1	3,712,791	3.3	3,762,849	3.3
보령시	4,248,901	3.7	3,901,118	3.4	4,234,257	3.7	4,190,195	3.6
아산시	30,788,562	26.6	30,218,688	26.2	28,971,663	25.5	29,923,576	25.9
서산시	17,637,719	15.3	17,793,365	15.4	18,138,852	16.0	15,843,904	13.7
논산시	3,662,308	3.2	3,790,489	3.3	4,080,662	3.6	4,439,047	3.8
계룡시	1,467,238	1.3	1,534,152	1.3	1,507,709	1.3	1,719,448	1.5
당진시	11,479,492	9.9	11,630,730	10.1	11,384,432	10.0	11,733,515	10.2
금산군	2,159,249	1.9	2,176,282	1.9	2,279,225	2.0	2,359,964	2.0
부여군	1,948,200	1.7	2,008,286	1.7	1,925,260	1.7	1,980,356	1.7
서천군	1,961,117	1.7	2,093,446	1.8	2,362,739	2.1	2,292,178	2.0
청양군	1,220,603	1.1	1,191,448	1.0	1,188,159	1.0	1,248,541	1.1
홍성군	3,195,308	2.8	3,270,406	2.8	3,349,387	3.0	3,512,347	3.0
예산군	3,229,751	2.8	3,254,282	2.8	3,323,778	2.9	3,537,211	3.1
태안군	2,936,952	2.5	2,878,107	2.5	2,876,636	2.5	2,876,612	2.5
합계	115,557,697	100.0	115,534,184	100.0	113,488,325	100.0	115,531,056	100.0

자료 :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충청남도 시군별 지역내총생산

주) 당해년 가격 기준

- 부여군의 지역내 총생산(GRDP)을 경제활동별로 살펴보면, 2020년 기준 농업의 부가가치가 4,297억원으로 전체 부가가치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다음으로는 제조업이 3,067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이 2,345억원으로 나타남

■ 부여군 산업 현황

- 부여군의 산업구성을 살펴보면, 2021년 기준 가장 많은 사업체를 보유한 산업군은 도매 및 소매업(1,891개)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로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1,136개), 숙박 및 음식점업(1,072개)순으로 나타남

[표 2-5] 2021년 기준 부여군 산업구성표

산업구분	사업체 (개)	종사자 (명)
합계	8,146	24,584
농업, 임업 및 어업	147	710
광업	8	73
제조업	546	2,94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136	1,187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33	283
건설업	982	2,849
도매 및 소매업	1,891	3,435
운수업	605	1,041
숙박 및 음식점업	1,072	2,042
정보통신업	46	239
금융 및 보험업	62	50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02	195
부동산업	121	50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18	39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47	1,917
교육 서비스업	182	1,84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29	2,92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18	51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701	977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kr) 충청남도부여군기본통계

제2절 부여군 재정 현황

1. 예산 규모

■ 세입예산

- 부여군 예산규모는 2023년 기준으로 884,479백만원이고, 그 중 일반회계가 723,400백만원으로 81.8%를 차지함

[표 5-1] 부여군 2023년도 예산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예산액	884,479	723,400	47,543	1,857	111,679
비율	100.0	81.8	5.4	0.2	12.6

주) 당초예산 총계 기준

- 부여군의 예산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에 539,351백만원에서 2023년 884,479백만원으로 4년간 345,128백만원이 증가하여 연평균 10.4%의 증가율로 증가함

[표 5-2] 부여군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연평균 증가율
539,351	790,916	760,861	774,752	884,479	10.4

주) 당초예산 총계 기준

■ 예산 구조

- 부여군 예산의 일반회계 세입 구조를 살펴보면, 2023년에 지방교부세가 316,440백만원으로 가장 많은 43.7%를 차지하고, 국고보조금이

304,311백만원으로 42.1%를 차지함

- 그에 반해, 지방세는 43,550백만원으로 6.02%에 불과하고, 세외수입 또한 24,110백만원으로 3.33%에 지나지 않음
- 부여군 재정은 대부분 의존재원으로 충당되고 있음
 -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에 87%이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평균은 86.9%임
 - 그에 반해, 자체재원(지방세,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에 9.4%이고, 5년간 평균은 9.1%임

[표 5-3] 부여군 세입재원별 연도별 예산구조(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90,647	100	576,200	100	618,000	100	676,500	100	723,400	100
지방세	29,300	5.97	35,417	6.15	35,705	5.78	40,893	6.04	43,550	6.02
세외수입	16,064	3.27	17,057	2.96	16,737	2.71	22,399	3.31	24,110	3.33
지방교부세	201,613	41.09	263,369	45.71	254,642	41.20	312,848	46.25	316,400	43.74
조정교부금 등	8,000	1.63	8,000	1.39	8,800	1.42	8,800	1.30	8,800	1.22
보조금	210,716	42.95	222,754	38.66	272,643	44.12	280,973	41.53	304,311	42.07
지방채	0	0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4,954	5.09	29,603	5.14	29,473	4.77	10,587	1.57	26,229	3.63

주) 당초예산 총계 기준

- 세출 구조를 살펴보면, 2023년 기준으로 농림해양수산 분야 지출이 180,677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에서 25%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사회복지 분야 지출이 171,571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에서 23.7%를 차지하며, 문화 및 관광 분야 지출이 90,707백만원으로 12.5%를 차지하고 있음
- 농림해양수산 분야 지출 규모와 비중은 2019년 이후 증가추세에 있으며, 반대로 사회복지 분야 지출 규모와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음

[표 5-4] 부여군 세출분야별 연도별 예산 구조(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90,647	100	576,199	100	618,000	100	676,500	100	723,400	100
일반공공행정	19,856	4.05	21,807	3.78	43,149	6.98	33,022	4.88	31,218	4.32
공공질서및안전	4,507	0.92	5,540	0.96	4,768	0.77	8,606	1.27	9,679	1.34
교육	3,713	0.76	3,471	0.60	3,243	0.52	3,274	0.48	4,876	0.67
문화및관광	59,019	12.03	77,461	13.44	87,895	14.22	93,490	13.82	90,707	12.54
환경보호	25,474	5.19	36,952	6.41	25,161	4.07	34,859	5.15	44,464	6.15
사회복지	129,085	26.31	146,668	25.45	154,790	25.05	169,692	25.08	171,571	23.72
보건	10,045	2.05	11,832	2.05	13,340	2.16	13,862	2.05	13,924	1.92
농림해양수산	108,846	22.18	130,361	22.62	143,078	23.15	163,122	24.11	180,677	24.98
산업·중소기업	6,648	1.35	9,130	1.58	10,836	1.75	7,006	1.04	12,212	1.69
수송및교통	14,343	2.92	20,731	3.60	18,164	2.94	19,964	2.95	26,656	3.68
국토및지역개발	32,292	6.58	31,271	5.43	30,197	4.89	37,992	5.62	45,066	6.23
과학기술	-	-	-	-	-	-	-	-	-	-
예비비	6,099	1.24	10,093	1.75	7,617	1.23	8,677	1.28	5,312	0.73
기타	70,719	14.41	70,882	12.30	75,761	12.26	82,934	12.26	87,037	12.03

주) 당초예산 총계 기준

2. 재정여건

■ 재정자립도

- 부여군의 재정자립도는 2023년 당초예산기준 9.35%임

[표 2-6] 2023년 부여군 재정자립도

(단위: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등및내 부거래(E)
9.35 (12.98)	723,400 (723,400)	67,660 (93,888)	629,512 (629,512)	0	26,229 (0)

주1) 일반회계기준,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

▶ 자체세입: 지방세(지방교육세제외)+세외수입

▶ 이전재원: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등+보조금

자료: 부여군 2023년 재정공시(예산기준)

-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부여군의 재정자립도 추이를 보면, 2021년까지 지속적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22년부터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남

[표 2-7] 부여군 재정자립도 추이(2019년~2023년)

(단위: %)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재정자주도	9.25% (14.33%)	9.11% (14.24%)	8.49% (13.25%)	9.36% (10.92%)	9.35% (12.98%)

주) 일반회계 기준,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

자료: 부여군 2023년 재정공시(예산기준)

■ 재정자주도

- 2023년도 부여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4.31%임

[표 2-8] 2023년 부여군 재정자주도

(단위: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등및내 부거래(E)
54.31% (57.93%)	723,400 (723,400)	392,861 (419,089)	304,311 (304,311)	0	26,229 (0)

주) 일반회계 기준,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

▶ 자주재원: 자체세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등

자료: 부여군 2023년 재정공시(예산기준)

-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의 부여군 재정자주도 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51%~57% 수준의 재정자주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표 2-9] 부여군 재정자주도 추이(2019년~2023년)

(단위: %)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재정자주도	51.97% (57.05%)	56.20% (61.34%)	51.11% (55.88%)	56.90 (58.47%)	54.31% (57.93%)

주) 일반회계 기준,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
 자료: 부여군 2023년 재정공시(예산기준)

■ 중기지방재정계획

- 부여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 향후 부여군의 재정상황을 살펴봄
-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부여군의 세입은 연평균 0.5%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그 중, 자체수입은 1%로 증가하고, 이전수입은 0.7%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표 2-1] 부여군 중기지방재정계획(2023-2027)의 자원별 재정전망

(금액: 백만원,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연평균 증가율
세입	1,139,945	1,151,070	1,167,860	1,163,161	1,170,330	5,792,365	0.53%
자체수입	69,625	70,257	70,486	72,327	73,327	356,022	1.04%
이전수입	945,512	955,908	979,769	974,062	979,319	4,834,570	0.71%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124,808	124,904	117,605	116,771	117,684	601,772	-1.17%
세출	1,139,945	1,151,070	1,167,860	1,163,161	1,170,330	5,792,365	0.53%
경상지출	178,551	181,808	185,322	188,808	206,120	940,609	2.91%
사업수요	961,394	969,262	982,538	974,353	964,210	4,851,757	0.06%

3. 행사·축제경비 및 지방보조금 편성 현황

1)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 2023년 기준 부여군 행사축제경비 편성액은 13,578백만원이고, 이 금액은 세출예산액 대비 1.88%에 해당함

[표 2-10] 2023년 부여군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단위: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723,400	13,578	1.88%

주1) 일반회계기준, 2023년 예산편성 내역 첫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주2)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201-03), 행사실비보상금(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 시설비(401-04)

자료: 부여군 2023년 재정공시(예산기준)

-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부여군의 행사축제경비 추이를 보면,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임
 - 다만, 세출예산액 대비 비율은 2021년에 감소한 후 다시 증가함

[표 2-11] 부여군 연도별 행사축제경비 현황(2019년~2023년)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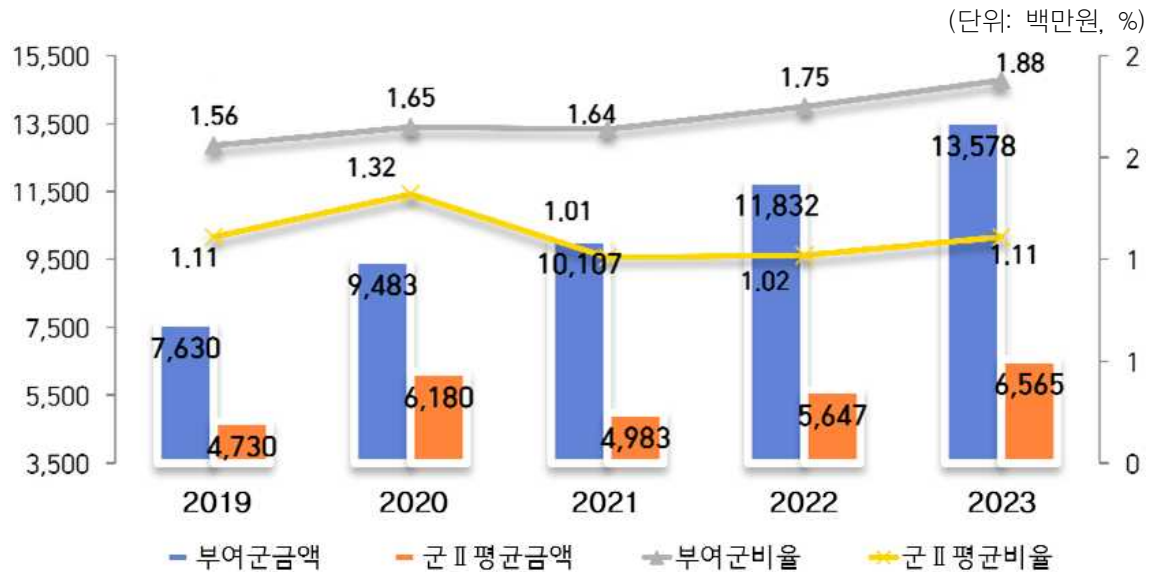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세출예산액	490,647	576,200	618,000	676,500	723,400
행사축제경비	7,630	9,483	10,107	11,832	13,578
비율	1.56%	1.65%	1.64%	1.75%	1.88%

주) 일반회계 기준

자료: 부여군 2023년 재정공시(예산기준)

- 이러한 부여군의 행사축제경비를 동일 유형 자치단체의 평균값과 비교하면 부여군의 행사축제경비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동일 유형의 자치단체의 행사축제경비는 2023년에 6,565백만원인데 반해 부여군은 13,578백만원으로 2배 이상 편성됨
 - 2019년 이후 부여군의 행사축제경비 편성액이 증가함에 따라 타 자치단체와의 격차 또한 커지는 경향을 보임
 - 행사축제경비 비율에서도 부여군은 동일 유형 자치단체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타 자치단체와의 격차 또한 과거에 비해 최근에 더 커지고 있음

[그림 2-4] 부여군과 동일유형 자치단체 간 행사축제경비 비교



2)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 2023년 기준 부여군 지방보조금 총 한도액은 22,751백만원이고, 예산편성액은 17,470백만원임
-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은 76.79%로 편성기준을 준수함

[표 2-12] 2023년 부여군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단위: 백만원, %)

총 한도액 (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 (B/A)
	계	한도 내(B)	한도 외 ³⁾	
22,751	17,470	17,470	0	76.79%

주1) 대상회계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기준

주2) 적용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주3)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 시·도 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자료: 부여군 2023년 재정공시(예산기준)

-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부여군의 지방보조금 추이를 보면, 2021년에 감소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임

[표 2-13] 부여군 연도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2019년~2023년)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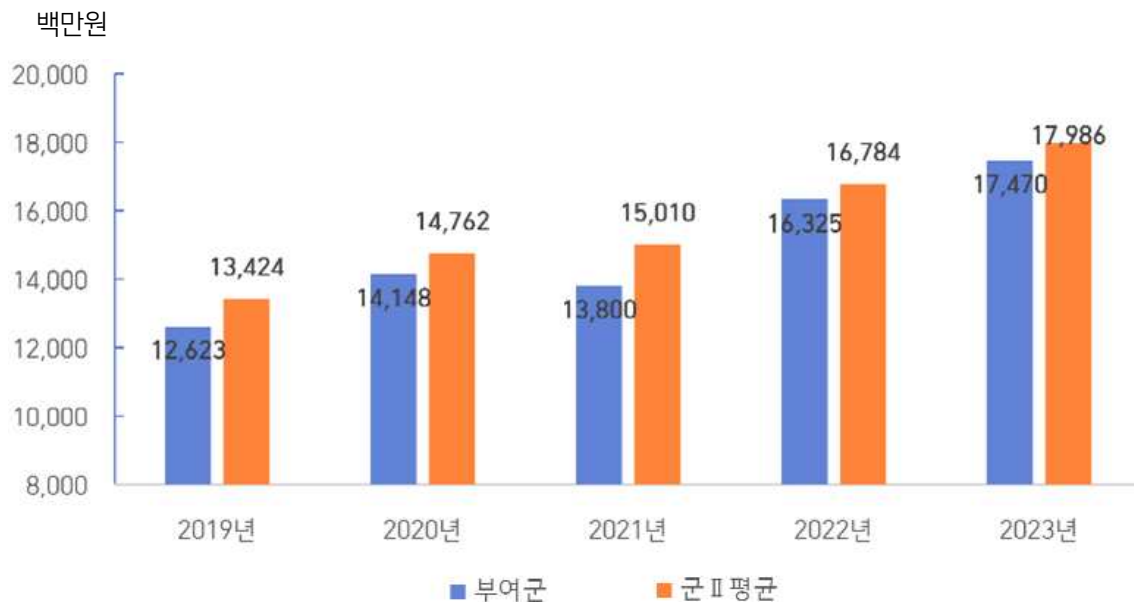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12,623	14,148	13,800	16,325	17,470
한도 내	-	-	13,800	16,325	17,470
한도 외	-	-	0	0	0

주) 일반회계 기준

자료: 부여군 2023년 재정공시(예산기준)

- 이러한 부여군의 지방보조금을 동일 유형 자치단체의 평균값과 비교하면 부여군의 지방보조금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동일 유형의 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은 2023년에 17,986백만원인데 반해 부여군은 17,470백만원으로 약간 적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2-5] 부여군과 동일유형 자치단체 간 지방보조금 비교



자료: 부여군 2023년 재정공시(예산기준)

제3장

부여군 재정 진단

제1절 진단 개요

제2절 지방보조사업예산 운영 분석

제3절 순군비사업예산 운영 분석

제4절 국·도비사업예산 운영 분석

제1절 진단 개요

1. 진단 목적

■ 부여군 세출예산 운용의 개선과제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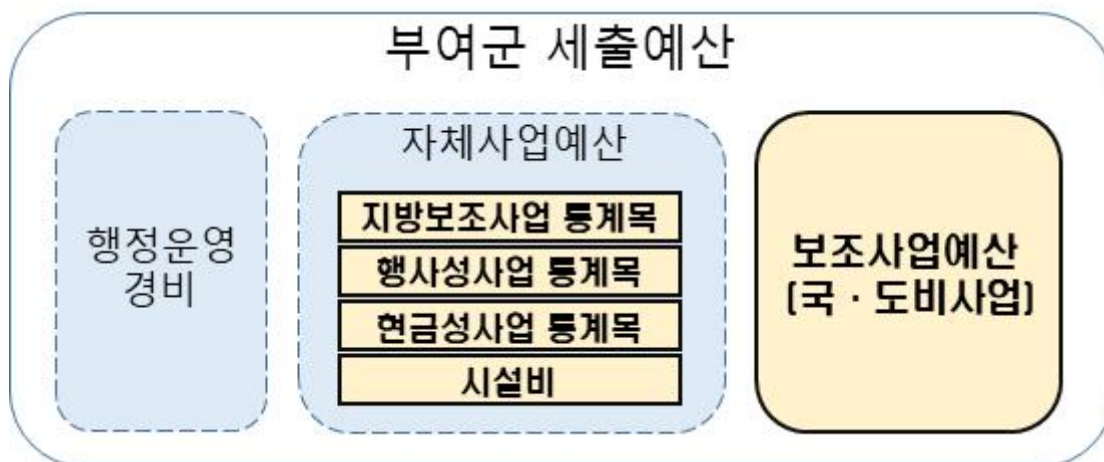
- 부여군 주요 사업예산을 대상으로 세출 및 관련제도 현황을 검토하여 예산이나 제도 운영상 미흡한 점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세출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2. 진단 대상

■ 재정진단 대상 구분

- 본 연구에서는 부여군의 세출예산을 행정운영경비, 자체사업예산, 보조사업 예산으로 대분한 후, 사업예산만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함
 - 행정운영경비의 지출 효율화는 연구대상으로 적절성이 낮고, 부여군에서는 2023년에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효율화 조치를 실시하였기 때문임
- 자체사업예산 중 세출효율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지방보조사업 통계목, 행사성사업 통계목, 현금성사업 통계목, 시설비만을 진단대상으로 함

[그림 3-1] 재정진단 대상 구분



- 자체사업예산에 대해서는 통계목 단위에서 일부만을 진단대상으로 설정한

데 반해, 보조사업예산에서는 전체 사업을 진단대상으로 설정함

■ 지방보조사업 예산

- 지방보조사업에 해당하는 통계목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사회복지사업 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가 있음

[표 3-1] 지방보조사업 통계목

그룹	편성목	통계목	분류기준
300 경 상이전	307 민간 이전	02. 민간경상사업보조	1.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2. 지방재정법 제17조의 보조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1.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보조금법」 제6조제2항 따라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2.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예산에 편성 3.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보조금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경우로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 ▶ 지원범위는 관련 근거법령에 따른 지원기준과 당해 단체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 ▶ 운영비 이외의 경상사업비 및 자본사업비는 편성할 수 없음
		04. 민간행사사업보조	1.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1. 주민 복지를 위해 법령의 명시적 근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운영비 지원 목적으로 편성하는 보조금 2.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예산의 편성기준에 따름
		11. 사회복지사업보조	1. 주민 복지를 위해 법령 또는 조례상 지원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보조금 또는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경비 1) 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 사업 2)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기타 이에 준하는 복지 관련 사업

그룹	편성목	통계목	분류기준
400 자 본지출	402 민간 자본이전	01. 민간자본사 업보조(자체재 원)	1.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직접 지급하는 보 조금

자료 : 행정안전부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행사성 사업 예산

- 본 연구에서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을 행사성 사업 예산으로 분류함

[표 3-2] 행사성 사업 예산 통계목

그룹	편성목	통계목	분류기준
200 물건비	201 일반 운영비	03. 행사운영비	1.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 - 초청장·홍보유인물·현수막·상패제작 등 행사개최에 따른 각종일반수용비 -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등 2.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중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 잡·다양한 행사의 경우 민간용역 가능
300 경 상이전	301 일반 보전금	11. 행사실비 지원금	1. 교육·세미나·공청회·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실비) (급량비는 매식비 기준단가 이내로 함) 2. 체육행사, 문화제행사, 세미나·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 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 (단순 참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3. 국가단위행사에 참석을 위한 여비 4. 산업시찰·견학·참여를 위한 실비

자료 : 행정안전부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현금성 사업 예산

- 본 연구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기타 보상금 사업을 현금성 사업 예산으로 분류함

[표 3-3] 현금성 사업 예산 통계목

그룹	편성목	통계목	분류기준
300 경 상이전	301 일반 보전금	02. 사회보장적 수혜금(취약계	1. 자치단체가 법령(조례포함)의 근거에 따라 자체적으로 추진 하는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현금성 수혜금 및 물품지원

그룹	편성목	통계목	분류기준
		총, 지방재원)	비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호에 따른 사업(지방재원으로만 편성된사업)
		03. 사회보장적 수혜금(지방재원)	1. 자치단체가 법령(조례포함)의 근거에 따라 자체적으로 추진(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현금성 수혜금 및 물품지원비(지방재원만)
		14. 기타 보상금	1.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보상금 또는 물품 2. 법령·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 3.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행사나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치료비 4.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 납부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0조의2에 따른 보상금 상환액

■ 시설비 사업 예산

- 본 연구는 시설비 사업 예산 통계목을 분석대상으로 함

[표 3-4] 시설비 사업 예산 통계목

그룹	편성목	통계목	분류기준
400 자 본지출	401 시설 비 및 부대 비	01. 시설비	1. 기본조사설계비 가.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 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되는 경비 나. 주요설계 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략공사비 산정에 소요되는 경비 2. 실시설계비 및 공모설계비 가. 실시설계비 -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사현장에서 공사 집행이 가능한 설계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 - 기본조사설계를 시행하는 사업은 기본조사 설계가 완료되고 당해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설계에 착수함 - 실시설계는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상의 사업물량을 초과하여 시행하여서는 아니됨 -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사업물량을 초과하여 실시설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착수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함 나. 공모설계비 - 턴키방식 등 설계를 공모하는 경우 소요되는 제반경비 3. 토지매입비 가. 사무실, 창고, 공장 등의 부지 및 기타 토지 매입비

그룹	편성목	통계목	분류기준
			<p>나. 건물 및 대단위 토목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의 보상비와 동 공사로 인한 손실(경영권, 광업권, 이전비 및 이농비 등)에 대한 보상비</p> <p>다. 재산권 변동을 위한 감정료, 측량수수료, 등기등록비 등</p> <p>4. 시설비</p> <p>가.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기구, 차량, 선박, 항공기의 신조 및 동부대시설(예 : 난방, 수도 등)에 필요한 경비</p> <p>나. 전력신호 및 전신전화, 선로 시설비와 동 부대경비</p> <p>다. 토지 정지공사비</p> <p>라. 도로, 하천 등의 건설 및 개·보수비, 소규모 도로, 하천건설 및 개·보수에 따른 용지 보상금, 지장물 철거 보상비, 기타 보상금</p> <p>마. 조림·사방·조경 등에 대한 사업비(인건비, 재료비 포함)</p> <p>- 조림사업에 있어 산주 실행분은 402-01(민간자본보조)에 계상</p> <p>바. 나~라사업시행과 관련한 취로사업비</p> <p>사. 건물,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 및 처리비(재료비포함)와 도장공사비 등 내용 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도로, 하천 등 유지보수를 위한 노임, 재료비, 유류대, 소규모 토지매입비 및 용지보상비 등 포함)</p> <p>- 책상 등 소규모 수리비는 201-01(사무관리비)에 계상</p> <p>아. 전신전화가입 및 가설료, 무선설비, 무선허가 신청료 및 검사료</p> <p>- 기업회계 등은 제외함</p> <p>자. 농지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p> <p>차.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p> <p>카.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에 소요되는 재료비(관급자재비 포함),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공사원가</p> <p>5. 문화재 발굴경비</p> <p>- 자치단체 시설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문화재 발굴 경비로서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p> <p>6. 시설의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경비</p> <p>- 건축·도로·교량 등 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p>

자료 : 행정안전부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국·도비사업 예산

- 국비사업, 군특회계사업, 도비사업 예산을 대상으로 함

3. 진단 내용

■ 관련 제도 현황 검토

- 지방보조사업, 행사성사업, 현금성사업, 시설비사업, 국·도비사업 예산과 관련된 법규나 제도를 검토함
- 관련 법규나 제도가 구비된 경우 예산 운용실태 분석을 토대로 미흡한 점이나 문제점을 분석한 후 개선과제를 제시함
- 만약 관련 법규나 제도가 구비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세출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를 제안함

■ 예산 운용실태 분석

- 지방보조사업, 행사성사업, 현금성사업, 시설비사업, 국·도비사업별로 세출 예산 운용실태를 분석함
- 통계목별로 사업수, 예산액, 평균치 등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고, 부서별 현황을 분석하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추이를 분석함
- 사업별 특성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분석을 실시함

4. 진단 방법

- 우선적으로 문헌검토를 실시하여 관련 제도 현황을 살펴봄
- 다음으로, 지방보조사업, 행사성사업, 현금성사업, 시설비사업, 국·도비사업 별로 예산액 자료에 대한 통계분석을 실시함
- 분석대상사업별 운용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업무담당자 인터뷰를 실시

제2절 지방보조사업예산 운영 분석

1. 지방보조사업 예산 운영기준³⁾

■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규 체계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규에는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이 있음
- 이러한 법규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서 정함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음
- 부여군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보조금 총액한도 운영

-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별로 한도액 범위내에서 사업별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의무화
 - 적용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적용기준 :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조금 예산은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지방비 부담금 포함)과 국가직접지원 사업 보조금을 제외한 순지방비 예산임
- 보조금 총액한도 계산식

3)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의미함.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이 지출되거나 교부되는 사업 또는 사무를 의미함.

- ❖ 전년도 보조금한도 기준액(총액한도)×(1+최근 3년간 일반회계 결산기준 자체수입 평균증감율)
 - 다만, 보조금 총액한도의 증가율은 전체예산(일반+기타특별회계)의 증가율(편성년도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을 초과하지 못함
 - 당해 자치단체 최근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결산액의 평균증감률 = 전전년도, 전전전년도, 전전전전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결산액의 전년대비 증감율의 평균

-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국제행사, 전국단위 및 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행사(전국체전 등)와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해당 자치단체 부담분, 지자체 매칭펀드사업 지방비 부담분 포함) 등은 제외.
- 일자리와 직접 연계된 사업은 총액한도 대상에서 제외. 단,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서 일자리 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에 한함
- 「지방세법」 제71조에 따라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전환사업)은 총액한도 대상에서 제외
-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수요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시·군·구는 시·도)와 사전협의를 거쳐 한도 증액 가능

■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상 지방보조금 편성기준

- 행정안전부의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시 준수해야할 일반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예산편성 일반원칙

- ▶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의 예산편성 원칙**
 - 지방보조사업자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목적의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이 경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또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편성)
 - 법령에 구체적인 지원근거가 없는 한, 국가기관(시설) 설립비 등 포괄적·일반적 예산편성 금지
 - 「지방보조금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비 예산 편성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보조금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
-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은 지방보조사업자의 성격,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별로 편성**
 - ※ 단, 「지방재정법」 제17조 등 지방보조금 관련 조항, 타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사업 지원 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참조하여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
 - ※ 국고보조금이 포함된 경우는 기재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름
- ▶ **자치단체가 사실상 주관하여 직접 시행하는 행사는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도록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고,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 금지**
- ▶ **투자사업 성격이 아닌 경비는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아닌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편성하고, 교부조건에 구체적인 사용 용도 및 필요한 경우 단체 해산 시 환수에 대한 내용을 적시**
- ▶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폐지**
- ▶ **일몰도래사업, 수혜대상이 극히 부분적인 보조금 사업 및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이 가능한 사업, 보조단체의 운영·유지 성격이 가능한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폐지**

- 예산편성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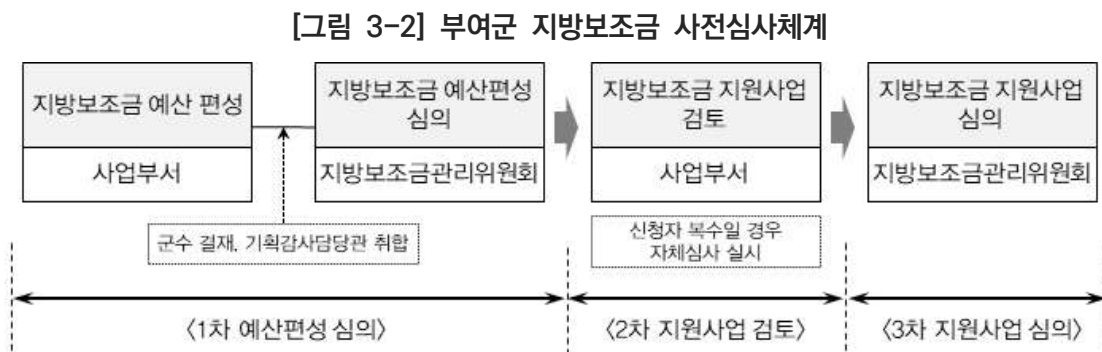
-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과정에서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반영 및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실질적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첫째,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 적발된 지방보조사업을 폐지·삭감하도록 함
- 둘째,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함. 보조사업 성과평가(매년) 및 유지 필요성 평가(3년마다) 결과가 미흡(60점 미만)한 경우 예산 삭감(최대 50%)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사업별 상대평가를 실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임을 밝힘
- 셋째, 유사중복 지방보조사업을 폐지·통폐합하도록 함. 국고보조사업(기초는 광역보조사업 포함)과 유사·중복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을 폐지하고 유사한 지방보조사업을 동일한 사업자가 수행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을 통폐합하도록 함
- 넷째, 신규사업에 대해 자체진단을 실시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강

화하도록 함.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의 평가기준(별표5)에 따라 사업계획 미흡 또는 사업성과 부진 등이 예상되는 경우 예산편성을 제외하도록 함

2. 부여군 지방보조금 평가 체계

■ 부여군 지방보조금 사전심사체계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때 몇 차례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⁴⁾



- 부여군은 상위법규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및 교부 단계에서 심사 체계를 조례와 시행규칙을 통해 세부적으로 규정함
 - 특히, 지원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해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함
- 우선, 지방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득해야 함
- 기획감사담당관은 지방보조사업 부서의 심의자료를 취합하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를 통해 지방보조사업 예산에 대해 심의함
- 심의를 거쳐 지방보조사업 예산이 편성되면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고를 통해 지방보조사업 희망자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음
- 군수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4)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8조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작성함. 다만, 지방보조금사업 신청자가 1인일 경우에는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평가가 수행되지 않고 아래 표와 같은 검토의견서만 작성함

- 지방보조사업 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서에서는 동일인·동일단체 유사·중복 사업 등 보조금 지원불가 단체 여부, 지방보조금 지원에 따른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지방보조사업 계획서의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지방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 및 자부담 능력 유무(잔액증명이나 통장사본) 등을 검토함
- 이를 바탕으로 보조사업금 지원 신청에 대한 종합의견을 제시함

[표 3-5] 부여군 지방보조사업 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서

별지3호 서식의 지방보조사업 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서			
지방보조사업 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서			
□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 내역			
신 청 자	성명 (또는 단체·법인명 대표자)		
사 업 명			
지원근거	※ 개별법령, 지원근거 규정 기재		
신 청 액	천원	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 검토 의견서			
※ 붙임 : 1. 사업별 자체심사결과, 2. 신청사업 평가표			
1.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확인결과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확인 내용			확인 결과
가. 동일인·동일단체 유사·중복 사업 등 보조금 지원불가 단체 여부			
나. 지방보조금 지원에 따른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다. 지방보조사업 계획서의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라. 지방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 및 자부담 능력 유무(잔액증명이나 통장사본)			
마.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 등) 체납여부			
바. 법 제12조제1항 각 호 및 조례 제28조제2항 각 호에 해당여부			
사. 단체·법인의 경우 임원이 지방세및세외수입 체납여부에 해당하거나 중복지원 유무 등			
아. 부여군에 주소를 둔 사업자 유무(권고사항임)			
2. 최근 3년간 해당사업 보조금 지원실적			
Y-3년 : 천원		Y-2년 : 천원	Y-1년 : 천원
3. 검토결과			
평 가 점 수	※ 붙임 평가표 총점 기재		
지원 검토액	천원	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총 합 의 견	보조금 지원 필요성 및 타당성 기재		
작성자(담당자)	직급 : 급	성명 : (서명)	
검토자(팀 장)	직위 : 팀장	성명 : (서명)	
확인자(부서장)	직위 : 과장	성명 : (서명)	

- 지방보조사업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아래 표와 같은 평가기준에 따라 신청사업을 평가함

[표 3-6] 부여군 지방보조금 신청사업 평가표

[첨부서류 2 : 신청사업 평가표]				
신청사업 평가표				
구 분	평 가 기 준	배점	평가점수	평가 시 착안사항
총 계		100		
세 부 평 가 항 목	사업 계획	1. 부서 추진사업, 다른 보조사업과의 유사 중복 여부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서 추진 사업과 유사 : △5점 ■ 다른 보조사업과의 유사 : △5점
		2. 사업계획의 필요성 및 타당성	20	정성평가 ■ 사업의 공익적 필요성 평가(2점씩 배점) (매우우수10, 우수8, 보통6, 미흡4, 불필요0)
		■ 사업계획의 필요성	10	
		■ 사업계획의 타당성	10	■ 사업의 타당성 (2점씩 배점) (매우우수10, 우수8, 보통6, 미흡4, 부적합0)
	공익 활동	3. 공익활동 수행범위	10	■ 부여군 전역에 걸친 사업이 아닌 경우(△5)
		4. 사업수행의 전문성	5	■ 공익사업 수행의 전문성 여부(1점씩 배점) - 단순 동호회 등 0점 처리
		5. 공익사업 활동 기간	5	■ 1년 이내 (평가제외, 자격미달) ■ 5년 이상(10), 4년 이상(7), 3년 이상(4), 2년 이상(1)
	목적 사업 신청	6. 예산편성 목적에 맞는 사업 신청	10	■ 해당 예산편성 목적에 맞는 공익사업 여부 (매우적합10, 적합8, 보통6, 미흡4, 부적합0)
	자부 담	7. 자부담예산 집행 계획	20	■ 총사업비 중 자부담 50% 이상(20), 40% 이상(15), 30% 이상(10), 20% 이상(5)
	예산 편성 적정 성	8. 자본적경비(재산형성) 편성 여부	-	■ 민간자본사업보조 등 자본적경비 편성 가능한 경우를 제외한 과목에서 자본형성적 사업계획이 있는 경우 지원 제외
		9. 선심성경비 또는 과다 편성, 포괄사업비 편성 - 부적절한 과다 편성	10	■ 선심성 경비 또는 과다편성(△5점) ■ 포괄사업비 편성 (△5점)
		10. 사업비 중 식비 지출	10	■ 총사업비 중 식비지출 50% 이상(△10), 40% 이상(△8), 30% 이상(△6), 20% 이상(△4), 10% 이상(△2)
감 점 항 목	정산 관련	11. 지난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반납 실적	-	■ 사업완료 2개월 이후 실적보고한 사업자 △5 ■ 최초 반환명령에 따른 반납기한 이후 반납한 사업자 △5

※ 신청사업 평가표는 사업성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신청사업에 대한 평가기준은 크게 사업계획, 공익활동, 목적사업신청, 자부담, 예

산편성적성, 정산관련의 6개 항목으로 구분됨

- 지방보조금 신청사업 평가표에 의한 심사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은 지방보조금 신청 사업별 자체심사 결과표에 정리한 후, 심사의견을 기재하도록 함

[표 3-7] 부여군 지방보조금 신청 사업별 자체심사 결과표

[첨부서류 1 : 사업별 자체심사결과] ※ 신청자가 2개 이상인 경우 작성

사업별 자체심사 결과

- 사 업 명 :
- 신청자 수 :
- 자체 평가결과

(단위 : 천원/점)

신청자	자체심사 결과			평 가 결 과						기타 확인 사항	순위
	계	보조금	자부담	총점	사업 계획	공 익 활동실적	목적사업 신청여부	자기자본 부 담	예산편성 적 정 성		
총 계										적 합 부적합	
											1
											2
											3
											4
											5

☐ (사업부서) 자체심사의견

⇒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지방보조사업 신청서와 신청에 대한 심의의견서를 통해 신청사업에 대한 심의를 실시한 후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함
- 군수는 제출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함

■ 부여군 지방보조금 성과평가체계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해야 함.⁵⁾ 단,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사업 평가시 활용할 수 있도록 아래 표와 같은 세부 평가기준을 예시로 제시함
 - 각 분야의 운영내용 및 배점은 분야별 총 배점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평가기준에 따라 5개 등급(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으로 나누어 사업별 성과평가 실시하도록 함
 - 평가등급이 '미흡' 이하인 사업은 관련 예산 삭감 또는 지원중단을 원칙으로 함
 - 3년 단위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점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5) 단,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외 적용 가능함(「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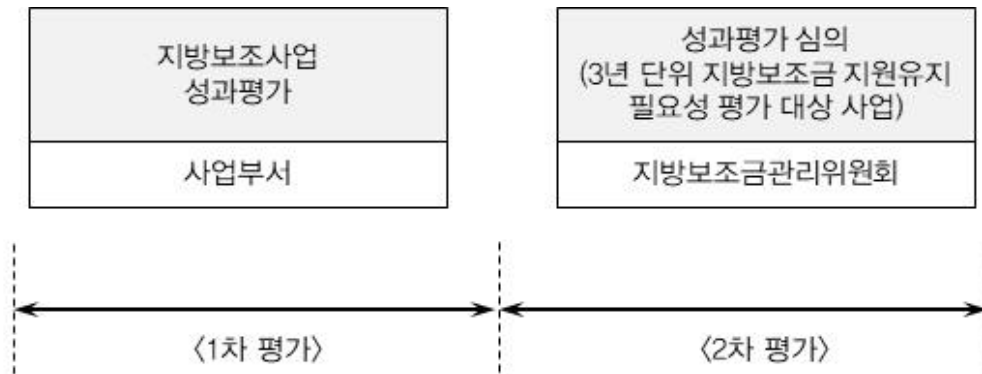
[표 3-8]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상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기준(예시)

분야	운 영 내 용	배점
사업계획 (15)	1-1. 다른 보조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1-2.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이 효율적이고 적절한가?	10 5
사업관리 (25)	2-1.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 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2-2.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 예산집행률, 기타 집행실적 등을 감안 2-3. 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 2-4. 보조금의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는가?	5 15 5 -20
사업성과 (60)	3-1.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3-2.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40 20
<p style="text-align: center;">20X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국장(과장) ○○○ (서명)</p>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별표 5

- 부여군은 이러한 상위법규 내에서 부여군 여건에 맞춰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함
 -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주체는 아래 그림과 같이 사업부서와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임
 - 우선, 사업부서는 평가대상에 포함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3년 단위로 지원 유지 필요성 평가를 실시함

[그림 3-3] 부여군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체계



- 부여군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경우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포함한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함
- 지방보조사업 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은 제출된 정산보고서와 실적보고서 등을 통해 정산검사와 성과평가를 실시함
-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사업의 3년 단위 지방보조금 지원유지 필요성 평가는 그 연도 중에 실시하는 성과평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표 3-9] 부여군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 시기 및 방법

평가 주체	평가 시기	평가 내용 (심의 내용)	평가 대상
지방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 (실무평가단 구성운영)	사업완료 후 다음연 도 5월말까지(매년) ※사업실적 보고기 한 반영	사업계획·관리·성과 3개 분야별 (성과평가표 참조)	국비 및 도비보조사업 또는 국가직 접지원(공모 등) 보조사업, 국제행 사, 전국 단위순회 행사에 따른 보 조사업, 예비군육성지원보조사업, 운 수업계보조사업, 교육기관보조사업 은 원칙적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이 중 군수가 필요하여 선택적 희망사업은 평가대상에 포함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사업완료 후 다음연 도 7월말까지 ※사업실적 보고기 한과 담당부서의 성 과평가 기한 반영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는 보조사업의 3 년 단위 지원유지 필요성 심의	

※ 자체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실무평가단은 부서의 장, 부서 내 팀장, 부서의 서무담당자로 구성운
영 한다.

자료: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는 아래와 같은 성과평가표를 통해 실시됨
 - 평가지표는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의 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고, 가점 및 감점 항목이 추가됨
 - 사업계획 분야에서는 사업의 유사중복성,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명확성, 사업의 구체성이 평가되고, 사업관리 분야에서는 사업의 계획적 집행, 사업비의 적정한 집행, 주기적인 사업추진관리 및 문제해결, 자부담 비율 준수, 전용카드 사용,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의 충실한 작성,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 및 결과보고서 작성이 평가되고, 사업성과 분야에서는 성과목표 달성, 군민의 편익이 평가됨
 - 성과평가표는 보조사업의 특수성(여건)에 따라 방침결정 후 평가항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평가 점수에 따라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80~89점), 보통(60~79점), 미흡(50~59점), 매우미흡(50점 미만)의 5단계의 등급이 결정되고, 평가등급이 “미흡” 이하인 사업은 관련예산 삭감 또는 지원중단을 원칙으로 함

[표 3-10] 부여군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표

[별지 제15호서식]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표(제14조 관련)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표						
보조사업명						
사업자	사업자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 '○○○ 외 0명'으로 기재, 5명 이내인 경우 사업자 모두 기재					
평가등급	1차(사업부서)	사업유형	<input type="checkbox"/> 일몰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점 등급					
등급결정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80~89점), 보통(60~79점), 미흡(50~59점), 매우미흡(50점 미만)	사업지속 필요성 (미흡이하등급)	사업지속	사업축소	사업폐지	
분야	평가지표	평가자 점수	배점 기준			
			매우미흡 (아니오)	미흡	보통	양호 (예)
합 계						
사업 계획 (10점)	① 다른 보조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유사·중복 없음 2, 유사·중복 있음 0)		0	-	-	2
	②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가?		0	0	1	3
	③ 사업에 대하여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목적, 내용, 대상, 일정, 단계 등 구체적 확인 가능여부)		1	2	3	5
사업 관리 (45점)	①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예산집행률 95%이상 10점, 90%이상 8점, 85%이상 6점, 80%이상 4점, 80%이하 2점 / 단, 집행부진사유가 예산절감으로 인정될 경우 10점)		2	4	6	10
	② 사업비 예산과목(지출비목)에 따라 적정히 집행하였는가? (내용 변경 등이 있을 때 사전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포함)		1	3	5	7
	③ 사업진행중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추진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1	2	3	5
	④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에 맞춰 예산을 집행하였는가?		1	2	3	5
	⑤ 보조금집행시 전용카드를 사용하였는가? (인건비등 카드사용이 불가한 부분 제외, 카드미사용건수 2건마다 △1)		1	2	3	5
	⑥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를 충실히 작성하고 있는가?		0	0	1	3
	⑦ 사업종료 후 사업결과에 대해 자체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결과(정산)보고서를 작성·제출하였는가? (사업추진실적 제출여부△10, 정산기일 준수여부△2, 보고내용의 충실 여부△6 등)		2	4	6	10
사업 성과 (45점)	① 계획된 성과목표를 달성하였는가?		3	6	9	15
	② 당해 사업이 군민의 편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가? (단체회원들간 행사 △6, 단체행사 자부담 20%이하 △6)		3	6	9	15
	③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가?		3	6	9	15
가점	① 부정수급방지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	-	-	3
	② 보조사업자는 수행및정산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였는가?		-	-	-	3
감점	①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임의로 처분한 사실이 있는가?		-	-	-	-10
	② 보조금을 용도 외 사용한 사실이 있는가? (변경승인없이 자의적 집행, 사업기간 종료 후 집행, 교부결정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 등)		-	-	-	-15

※ 평가등급이 “미흡” 이하인 사업은 관련예산 삭감 또는 지원중단을 원칙으로 함.
 ※ 보조사업의 특수성(여건)에 따라 방침결정 후 평가항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부여군 지방보조금 주요 현황

■ 유형별 지방보조사업 현황

- 부여군 지방보조금은 2023년 4회 추경예산 기준으로 214억원 정도이고 지방보조사업 수는 421개임
- 사업별 예산액은 평균 51백만원인데, 표준편차가 142로 매우 크게 나타나 사업별로 예산액 차이가 크다는 것을 보여줌

[표 3-11] 부여군 지방보조사업 유형별 현황(2023년 4회추경예산 기준)

(백만원, %)

유형	개수	예산액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민간경상사업보조	93 (22.1%)	3,145 (14.7%)	34	53	2	400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30 (7.1%)	1,609 (7.5%)	54	72	5	315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87 (20.7%)	7,669 (35.9%)	88	142	4	866
민간행사사업보조	186 (44.2%)	6,936 (32.5%)	37	176	1	1,700
사회복지사업보조	8 (1.9%)	134 (0.6%)	17	17	2	46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7 (4.0%)	1,880 (8.8%)	111	139	1	559
전체	421 (100%)	21,374 (100%)	51	142	1	1,700

주) 사업수는 통계목 기준임

- 사업 수 기준으로는 민간행사사업보조가 186개로 전체 사업 중 44.2%를 차지함. 다음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가 93개(22.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가 87개(20.7%)로 많은 수를 차지함
- 예산액 기준으로는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이 약 77억원(35.9%)으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약 69억원(32.5%),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약 31억원(14.7%) 순으로 큼

■ 부서별 지방보조사업 현황

- 부여군 지방보조사업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과가 100개(23.8%)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다음으로 사회복지과가 61개(14.5%), 가족행복과가 60개(14.3%), 자치행정과가 49개(11.6%)를 추진하고 있음

[표 3-12] 부여군 지방보조사업 부서별 현황(2023년 4회추경예산 기준)

(백만원, %)

부서	개수	예산액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기획감사담당관	2 (0.5%)	190 (0.9%)	95	61	52	138
투자유치담당관	2 (0.5%)	28 (0.1%)	14	8	8	20
자치행정과	49 (11.6%)	1,365 (6.4%)	28	65	1	400
사회복지과	61 (14.5%)	1,366 (6.4%)	22	47	1	266
가족행복과	60 (14.3%)	3,639 (17.0%)	61	146	1	866
전략사업과	1 (0.2%)	19 (0.1%)	19	0	19	19
농업정책과	46 (10.9%)	4,254 (19.9%)	92	127	2	570
경제교통과	3 (0.7%)	40 (0.2%)	13	11	3	25
축수산과	15 (3.6%)	403 (1.9%)	27	24	5	80
굿뜨래경영과	6 (1.4%)	245 (1.1%)	41	46	10	133
산림녹지과	9 (2.1%)	526 (2.5%)	58	60	2	170
환경과	4 (1.0%)	46 (0.2%)	12	13	2	30
문화체육관광과	100 (23.8%)	7,237 (33.9%)	72	239	1	1,700
문화재과	20 (4.8%)	175 (0.8%)	9	8	2	23
안전총괄과	8 (1.9%)	90 (0.4%)	11	7	2	20
건설과	1 (0.2%)	320 (1.5%)	320	0	320	320
도시건축과	4 (1.0%)	443 (2.1%)	111	103	20	210
보건소	4 (1.0%)	94 (0.4%)	23	6	18	30
농업기술센터	22 (5.2%)	794 (3.7%)	36	20	8	80
상하수도사업소	4 (1.0%)	101 (0.5%)	25	21	11	57
전체	421 (100%)	21,374 (100%)	51	142	1	1,700

주) 사업수는 통계목 기준임

- 부서별 지방보조사업 예산액을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과의 지방보조사업 예산이 약 72억원(33.9%)이고, 다음으로 농업정책과가 약 42억원(19.9%), 가족행복과가 36억원(17.0%)으로 나타남
- 부서별 지방보조사업 개수 순위와 예산액 순위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사업별 규모 차이가 크기 때문임
 - 농업정책과에서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은 사업별 예산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부서별로 어떤 유형의 사업이 많은지를 살펴봄
 - 가족행복과의 60개 사업 중 21개(35.0%)는 민간행사사업보조임
 - 농업기술센터의 22개 사업 중 16개(72.7%)는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임
 - 농업정책과의 46개 사업 중 21개(45.7%)는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임
 - 문화재과의 20개 사업 중 15개(75.0%)는 민간행사사업보조임
 - 문화체육관광과의 100개 사업 중 69개(69.0%)는 민간행사사업보조임
 - 사회복지과의 61개 사업 중 31개(50.8%)는 민간행사사업보조임
 - 자치행정과의 49개 사업 중 24개(49.0%)는 민간경상사업보조임

[표 3-13] 부여군 지방보조사업 유형별, 부서별 교차분석(2023년 4회 추경예산 기준)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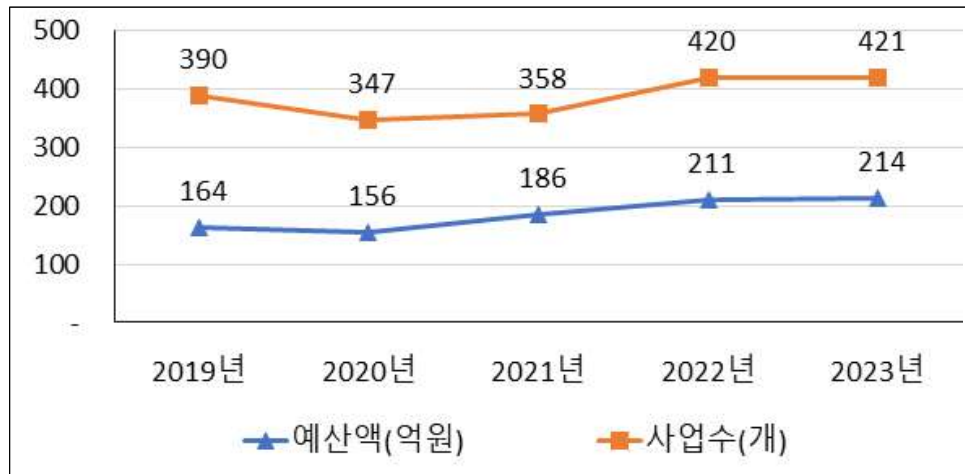
구분	민간경상사 업보조	민간단체법 정운영비보 조	민간자본사 업보조(자체 재원)	민간행사사 업보조	사회복지사 업보조	사회복지시 설법정운영 비보조	전체
가족행복과	7 (11.7%)	2 (3.3%)	17 (28.3%)	21 (35.0%)	3 (5.0%)	10 (16.7%)	60 (100.0%)
건설과	0 (0.0%)	0 (0.0%)	1 (100.0%)	0 (0.0%)	0 (0.0%)	0 (0.0%)	1 (100.0%)
경제교통과	1 (33.3%)	1 (33.3%)	0 (0.0%)	1 (33.3%)	0 (0.0%)	0 (0.0%)	3 (100.0%)
굿뜨래경영 과	4 (66.7%)	0 (0.0%)	1 (16.7%)	1 (16.7%)	0 (0.0%)	0 (0.0%)	6 (100.0%)
기획감사담 당관	1 (50.0%)	1 (50.0%)	0 (0.0%)	0 (0.0%)	0 (0.0%)	0 (0.0%)	2 (100.0%)
농업기술센 터	2 (9.1%)	0 (0.0%)	16 (72.7%)	4 (18.2%)	0 (0.0%)	0 (0.0%)	22 (100.0%)
농업정책과	16 (34.8%)	0 (0.0%)	21 (45.7%)	9 (19.6%)	0 (0.0%)	0 (0.0%)	46 (100.0%)
도시건축과	0 (0.0%)	0 (0.0%)	4 (100.0%)	0 (0.0%)	0 (0.0%)	0 (0.0%)	4 (100.0%)
문화재과	3 (15.0%)	0 (0.0%)	2 (10.0%)	15 (75.0%)	0 (0.0%)	0 (0.0%)	20 (100.0%)
문화체육관 광과	25 (25.0%)	6 (6.0%)	0 (0.0%)	69 (69.0%)	0 (0.0%)	0 (0.0%)	100 (100.0%)
보건소	1 (25.0%)	0 (0.0%)	2 (50.0%)	1 (25.0%)	0 (0.0%)	0 (0.0%)	4 (100.0%)
사회복지과	1 (1.6%)	14 (23.0%)	3 (4.9%)	31 (50.8%)	5 (8.2%)	7 (11.5%)	61 (100.0%)
산림녹지과	1 (11.1%)	0 (0.0%)	4 (44.4%)	4 (44.4%)	0 (0.0%)	0 (0.0%)	9 (100.0%)
상하수도사 업소	3 (75.0%)	0 (0.0%)	1 (25.0%)	0 (0.0%)	0 (0.0%)	0 (0.0%)	4 (100.0%)
안전총괄과	0 (0.0%)	1 (12.5%)	3 (37.5%)	4 (50.0%)	0 (0.0%)	0 (0.0%)	8 (100.0%)
자치행정과	24 (49.0%)	4 (8.2%)	1 (2.0%)	20 (40.8%)	0 (0.0%)	0 (0.0%)	49 (100.0%)
전략사업과	1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0%)
축수산과	1 (6.7%)	0 (0.0%)	9 (60.0%)	5 (33.3%)	0 (0.0%)	0 (0.0%)	15 (100.0%)
투자유치담 당관	1 (50.0%)	0 (0.0%)	1 (50.0%)	0 (0.0%)	0 (0.0%)	0 (0.0%)	2 (100.0%)
환경과	1 (25.0%)	1 (25.0%)	1 (25.0%)	1 (25.0%)	0 (0.0%)	0 (0.0%)	4 (100.0%)
전체	93 (22.1%)	30 (7.1%)	87 (20.7%)	186 (44.2%)	8 (1.9%)	17 (4.0%)	421 (100.0%)

주) 사업수는 통계목 기준임

■ 부여군 지방보조사업 추세

- 부여군 지방보조사업은 예산액과 사업수 모두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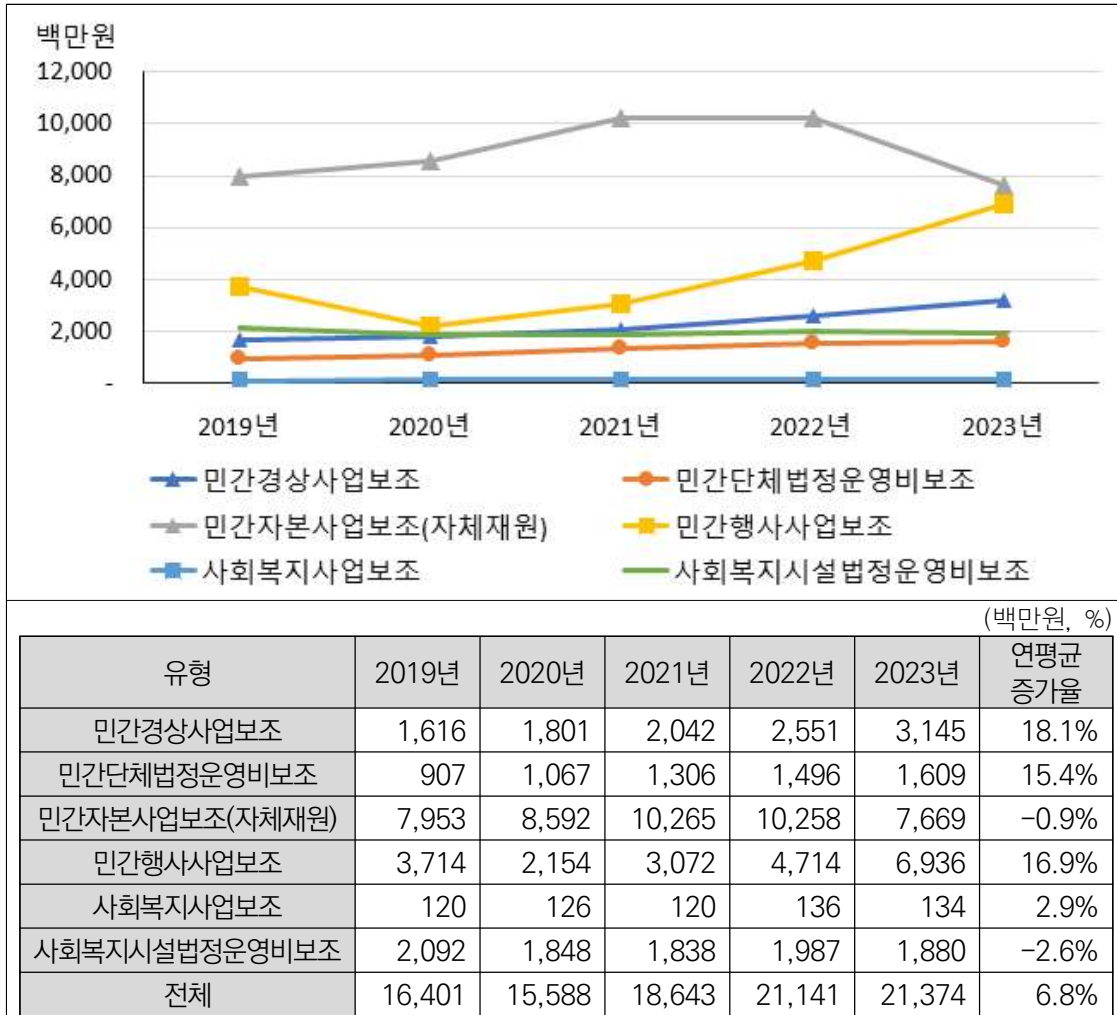
[그림 3-4] 부여군 지방보조사업 예산액 및 사업수 추이



주) 사업수는 통계목 기준임

- 부여군 지방보조사업의 유형별, 연도별 예산액을 살펴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금이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보조사업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의 예산은 2023년에 크게 감소하여 2019년 수준으로 돌아감
 - 민간행사사업보조 예산은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에 약 70억원 수준에 이름
 -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예산은 2019년부터 2023년 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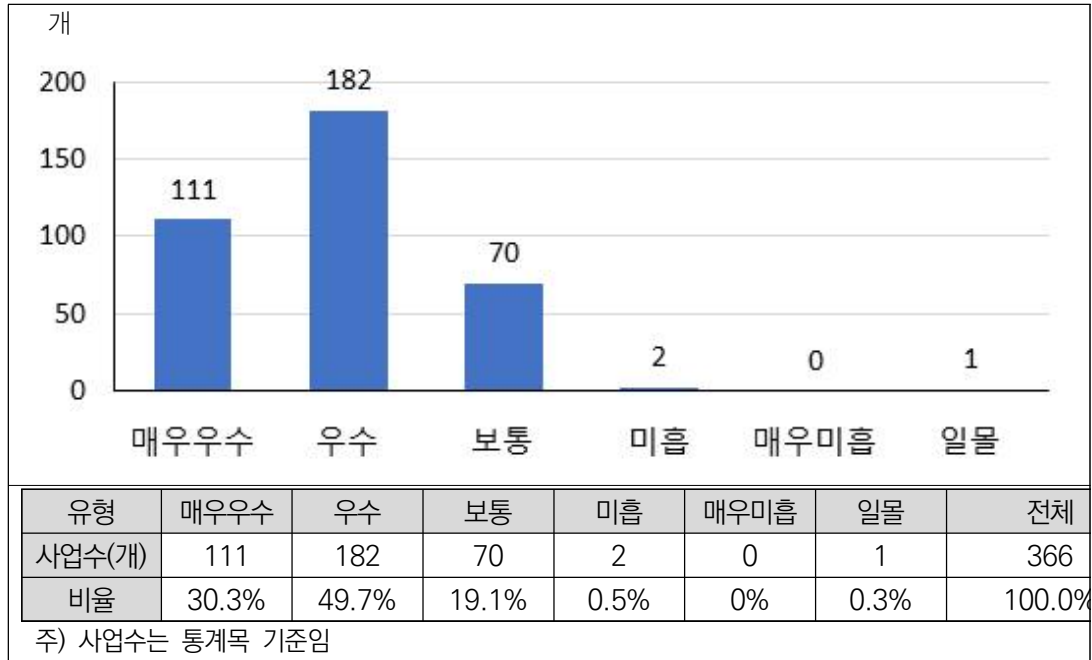
[그림 3-5] 부여군 지방보조사업 유형별·연도별 예산액



■ 부여군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 2022년 기준 부여군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사업의 80% 정도가 '우수' 이상 등급으로 나타남
 - 전체 366개 사업 중 111개(30.3%)의 사업이 '매우 우수' 등급으로 나타났고, 182개(49.7%) 사업이 '우수' 등급으로 나타남
 - 70개(19.1%) 사업이 '보통' 등급으로 나타남
 - 그에 반해, 2개(0.5%) 사업만이 '미흡' 이하 등급으로 나타남

[그림 3-6] 부여군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2022년)



- 지방보조사업 유형별 성과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업이 '우수' 이상 등급으로 나타남
 - 민간경상사업보조 유형에서는 전체 79개 사업 중 64개(81.0%)의 사업이 '우수' 등급 이상으로 나타났고, '미흡' 이하 등급 사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유형에서는 전체 16개 사업 모두 '우수' 등급 이상으로 나타남
 -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유형에서는 전체 99개 사업 중 73개(73.7%)의 사업이 '우수' 등급 이상으로 나타났고, 1개 사업이 '미흡' 등급으로 나타남
 - 민간행사사업보조 유형에서는 전체 152개 사업 중 121개(79.6%)의 사업이 '우수' 등급 이상으로 나타났고, 1개 사업이 '미흡' 등급으로 나타남
 - 사회복지사업보조 유형에서는 전체 7개 사업 중 6개(85.7%)의 사업이 '우수' 등급 이상으로 나타났고, '미흡' 이하 등급 사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유형에서는 전체 13개 사업 모두 '우수' 등급 이상으로 나타남

[표 3-14] 부여군 지방보조사업 유형별 성과평가결과(2022년)

(개, %)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일몰	전체
민간경상사업보조	27 (34.2%)	37 (46.8%)	15 (19.0%)	0 (0.0%)	0 (0.0%)	0 (0.0%)	79 (100%)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5 (31.3%)	11 (68.8%)	0 (0.0%)	0 (0.0%)	0 (0.0%)	0 (0.0%)	16 (100%)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34 (34.3%)	39 (39.4%)	24 (24.2%)	1 (1.0%)	0 (0.0%)	1 (1.0%)	99 (100%)
민간행사사업보조	39 (25.7%)	82 (53.9%)	30 (19.7%)	1 (0.7%)	0 (0.0%)	0 (0.0%)	152 (100%)
사회복지사업보조	2 (28.6%)	4 (57.1%)	1 (14.3%)	0 (0.0%)	0 (0.0%)	0 (0.0%)	7 (100%)
사회복지시설법정운 영비보조	4 (30.8%)	9 (69.2%)	0 (0.0%)	0 (0.0%)	0 (0.0%)	0 (0.0%)	13 (100%)

-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기간의 성과평가 결과에서 대부분의 사업이 '우수' 이상 등급으로 나타남
 - 3년 동안 '미흡' 등급 이하의 비율은 1% 이하로 나타남

[표 3-15] 부여군 지방보조사업 연도별 성과평가결과

(개, %)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일몰	전체
2020년	111 (38.5%)	119 (41.3%)	55 (19.1%)	2 (0.7%)	1 (0.3%)	-	288 (100.0%)
2021년	104 (34.4%)	116 (38.4%)	80 (26.5%)	1 (0.3%)	1 (0.3%)	-	302 (100.0%)
2022년	111 (30.3%)	182 (49.7%)	70 (19.1%)	2 (0.5%)	0 (0.0%)	1 (0.3%)	366 (100.0%)

- 이러한 평가결과의 관대화 경향은 사업부서에서 지방보조사업을 스스로 평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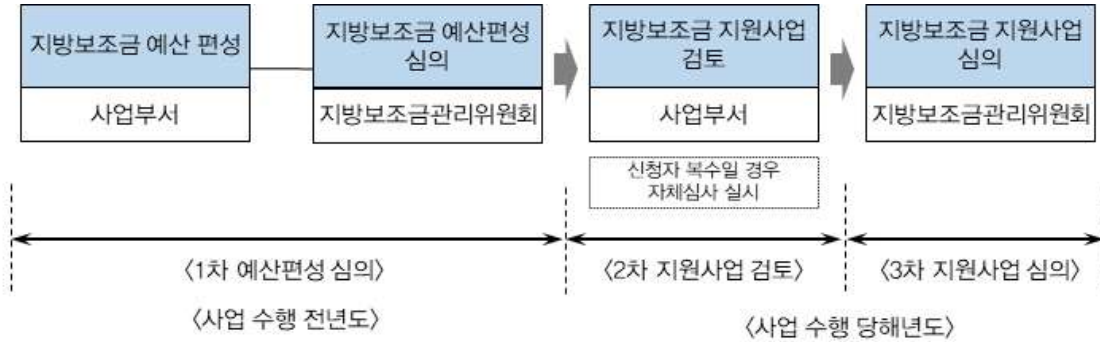
4. 부여군 지방보조금 개선과제

■ 지방보조사업 사전심사의 통제기능 미흡 및 통합관리 부재

- 부여군의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사전 평가는 사업수행 전년도에 지방보

조금 예산 편성시 심의, 사업수행 당해연도의 사업부서 지원사업 검토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 3단계로 구성됨

- 3단계 중 사업부서에서 수행하는 지원사업 검토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확인사항 검토와 신청사업 심사로 구성되는데, 신청사업 심사는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만 실시



[그림 3-7] 부여군 지방보조금 사전 평가체계(기존 방식)

- 그에 따라 신청자가 1인일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 신청서에 대한 심사가 실시되지 않아 부실한 사업신청을 사전에 통제하기 어려울 수 있음
- 신청사업에 대해 사업부서별로 심사가 이루어져 부여군 전체 사업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관리 미흡

- 부여군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시 실시되는 사전심사체계에서는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관리가 다소 미흡함
-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신청사업 평가표에서 유사중복성은 일부 지표로 구성되어 있어, 유사중복된 사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운 구조임
-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시 심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행정안전부는 유사중복 지방보조사업을 폐지·통폐합하도록 함. 국고보조사업(기초는 광역보조사업 포함)과 유사·중복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을 폐지

하고 유사한 지방보조사업을 동일한 사업자가 수행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을 통폐합하도록 함

■ 부실한 신규사업에 대한 차단방안 미흡

-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별지3호 서식에 의하면, 지방보조금 신규사업에 대한 2개 이상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신청사업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음. 더욱이 적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점수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그에 따라 사업계획이 미흡하거나 사업수행단체의 적격성이 낮더라도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 이는 신규사업의 부실한 운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신규사업에 대한 심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행정안전부는 신규사업에 대해 자체진단을 실시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하도록 하도록 함.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의 평가기준(별표 5)에 따라 사업계획 미흡 또는 사업성과 부진 등이 예상되는 경우 예산편성을 제외하도록 함.
 - 예를 들어, 사업계획 9점 미만(총 15점) 또는 사업성과 36점 미만(총 60점)인 경우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함

■ 성과평가 관대화 경향

-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부여군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 '우수' 이상 등급으로 나타났고 '미흡' 이하 등급 사업은 1% 이하로 나타나, 성과평가 관대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이러한 부여군의 성과평가 실태는 지방보조사업을 효율화하고 효과성을 증진하며 예산낭비를 줄이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성과평가가 실질화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 가이드에 따라 상대평가를 도입하여 '미흡' 이하 등급의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함
-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

도록 함. 보조사업 성과평가(매년) 및 유지 필요성 평가(3년마다) 결과가 미흡(60점 미만)한 경우 예산 삭감(최대 50%)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사업별 상대평가를 실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임을 밝힘

■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 부족

- 부여군의 민간행사사업보조금은 높은 증가율로 증가하여 2023년에는 지방보조금 중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함
- 행정안전부는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도록 함
-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사업 특성에 따른 보조 원칙 부재

- 민간경상보조사업 중 행사성 사업의 경우 사업의 파급효과가 해당 회원이나 집단에 국한됨에도 자부담 수준이 낮거나 자부담이 없음
- 특정 계층이나 집단의 특정 활동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하여 최소 50% 이상 자부담 매칭이 바람직함(엄근섭, 2012)
 -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자기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무분별한 보조사업 신청을 자제시키기는 기능을 수행함
- 행사성 사업의 경우 사업성과를 엄밀히 평가한 후 자체 행사역량이 조성되었거나 당초 목표한 성과가 달성되었다면 일몰제로 사업을 종료하거나 보조금 지원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음(엄근섭, 2012)

제3절 순군비사업예산 운영 분석

1. 주요 재정사업 평가제도⁶⁾

■ 평가제도 개요

- 주요 재정사업 평가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내부의 사업수행 부서가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하고 예산부서가 확인 점검한 평가결과를 지방 재정 운용에 활용하는 제도
- 「지방재정법」 제5조 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에 근거를 둠
 - 「지방재정법」 제5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 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요 재정사업의 평가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주요 재정사업 평가는 크게 사전심사와 사후평가로 구분됨

■ 사전심사

- 주요재정사업에 대한 사전심사는 사업추진 이전에 실시하는 평가로서, 시·도 및 시·군·구의 신규 행사·공연·축제 등 신규 행사성 사업을 대상으로 함
 - 단, 정부 승인 국제행사, 투자사업 심사대상,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사업, 다른 기준에 따라 예산편성전 사전심사를 기 시행한 사업, 행사성 사업비 전액이 참가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적 경비(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인 경우는 사전심사에서 제외 가능함
- 평가 주체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인이 3/4이상으로 구성된 민간위원회로 구성해야 함
 - 지역축제위원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등 기존 민간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음
- (내용 및 절차) 민간위원회에서 신규 행사성 사업의 목적성·타당성·사업비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심사 평가를 실시함

6) 행정안전부예규 제132호(2020.11.13.개정),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

- 사전심사 평가 결과에 따라 우선 순위 선정, 예산안 반영 등이 조치가 실시됨
- 계획 수립(예산/재정사업평가 부서) → 대상 제출(사업부서) → 민간위원회 심사
→ 결과 확인·통보(예산/재정사업평가 부서 → 사업부서) → 예산안 작성·제출(사업부서 → 예산부서)
- 민간위원회의 객관성 있는 사전심사를 통해 선심성·낭비성 행사·축제 신설을 억제하기 위한 것임

■ 주요재정사업의 사후평가

- 평가대상 사업은 투자사업과 행사성사업이고,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설정됨
 - 시·도의 경우 5억원 이상, 시·군·구의 경우 2억원 이상의 투자사업이 대상사업으로 설정됨
 - 시·도 및 시·군·구 공연·축제 등의 행사성사업임
 - 단, 행사성 사업비 전액이 실비보상금(급량비 및 교통비)인 경우는 제외
 - 여기에서 총사업비는 평가대상 회계연도 사업비를 의미함
 - 평가단위는 세출예산의 세부사업 단위로 함
- 아래의 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사업
 -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 등 평가 실익이 적은 사업
 - 국·도(시)비 보조사업

■ 평가절차 및 방법

- 투자사업은 자체평가 및 예산부서 확인·점검 등 순차적 진행
 - 평가계획 수립 → 사업부서 자체평가 → 평가결과 제출 → 확인·점검을 통해 평가점수 결정
 - 각 부서별 재정사업 평가대상 사업을 예산부서에 제출하고, 예산부서에서는 제출사항의 누락 여부 등을 검토하여 확정
 - 각 사업부서별로 자체 평가 또는 민간위원회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예산부서에 제출
 - 예산부서는 부서별로 제출받은 자체 또는 민간위원회 평가결과를 토대로 최종 평가 결과 확정
 - 이후 예산부서는 사업별 제도개선 권고사항 마련 및 각 사업부서 통보하고, 평

가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함

- 행사성 사업은 민간위원회 사후평가 및 예산부서 확인·점검
 - 평가계획 수립 → 민간위원회 사후평가 → 평가결과 제출 → 확인·점검을 통해 평가점수 결정
- 자체평가는 광역(실국 단위), 기초(실과 단위)의 해당 사업부서에서 실시하
되, 필요시 전문연구기관의 지원 및 현장 실사 병행 가능
- 행사성 사업은 민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후 평가 실시하되, 지역여건을 고
려하여 지역축제위원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15명 이내. 민간인3/4이상)
등 기존 민간위원회 활용 가능
- 자치단체 특성에 따라 투자사업은 사업부서의 자체평가 절차 없이 예산부
서에서 총괄하여 평가하고 이를 확정할 수 있음
- 사업부서 자체평가(투자사업) 또는 민간위원회 사후평가(행사성사업)는 상
대평가 방식으로 실시
 - ‘우수’이상 사업비율 20%이내, ‘미흡’이하 사업비율 10%이상 의무화
 - 단, 투자사업 중 차년도 예산안 반영과 무관한 완료사업의 경우 절대평가
- 결과는 평가지표별 점수를 종합한 후 사업별로 5단계로 등급화함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90점 이상)	(89~80점)	(79~70점)	(69~60점)	(60점 미만)

- 절대평가 대상 완료사업을 제외한 실국(실과)별 평가대상 사업 수가 10개 미만
일 경우 별도의 상대평가 기준 적용 가능함

[표 3-16] 주요재정사업평가 실국(실과)별 상대평가 적용 기준표

사업수	우수 이상	보통	미흡 이하
1~3	절대평가		
4	1	2	1
5	1	3	1
6	1	4	1
7	1	5	1
8	2	5	1
9	2	6	1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 p.3

- 평가결과 예산 반영시, 사업특성 및 평가지표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우수’ 이상 등급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 증액 또는 유지
 - ‘미흡’ 이하 등급 사업은 ‘예산 10%이상 삭감 원칙’을 적용
 -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의무지출사업, 연도별 지출소요가 확정된 사업 등은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예외 인정 가능
 - ‘매우 미흡’ 등급 사업은 재평가를 통한 등급 개선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예산 미반영
 - ‘보통’ 이상 등급 사업이라도 평가지표의 특성 및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사업 재검토, 통합조정 등 제도개선 권고
 - 예를 들어, 사업목적 불명확 → 사업 재검토 / 유사중복 → 사업 통폐합 또는 연계 강화 / 연례적 집행부진 → 불용실적을 감안한 예산삭감 등

■ 평가지표

- 평가지표는 아래와 같이 계획, 관리, 성과환류 단계로 구분하여 11개 지표를 사용함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 배점	평가 결과
계획 (2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10)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2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3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5	
		소 계	10	
	성과계획의 적정성 (10)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5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5	
		소 계	10	
관리 (30점)	사업관리의 적정성 (30)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15	
		3-2.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5	
		3-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10	
		소 계	30	
성과 /환류 (50점)	성과달성 및 사업평가결과의 환류 (50)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30	
		4-2.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한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가?	10	
		4-3. 평가결과 및 외부지적사항을 사업구조개선에 환류하였는가?	10	
		소 계	50	
		계	100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 p.4

- 평가지표 및 평가배점은 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
- 사업의 유형 및 자치단체 특성에 적합한 추가 지표를 자율적으로 수립 후 가·감점 지표로 활용 가능
- 가·감점은 전체 배점의 5%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설정
- 가·감점 지표 항목에 사회적 가치 지표를 포함하여 가점 부여 가능

2. 순군비사업 예산 분석

1) 행사성사업 예산 분석

■ 부여군 행사성사업 현황

- 2023년 예산 기준으로 부여군의 행사성사업을 살펴보면, 사업수는 236개이고 그 중 행사운영비 사업이 155개, 행사실비지원금 사업이 81개임
- 예산을 살펴보면, 행사운영비가 약 24억원이고 행사실비지원금이 약 3억 원으로 나타남
 - 유형별 평균 사업예산액은 행사운영비가 약 16백만원이고, 행사실비지원금은 4백만원임
 - 행사성사업 예산 중 행사실비지원금은 소규모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고, 행사운영비가 상대적으로 큰 규모로 운영됨

[표 3-17] 부여군 행사성사업 예산 현황(2023년 4회 추경예산 기준)

(개, 백만원)

구분	사업수	예산액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행사운영비	155	2,416	16	32	0.2	248
행사실비지원금	81	329	4	7	0.2	56
전체	236	2,745	12	27	0.2	2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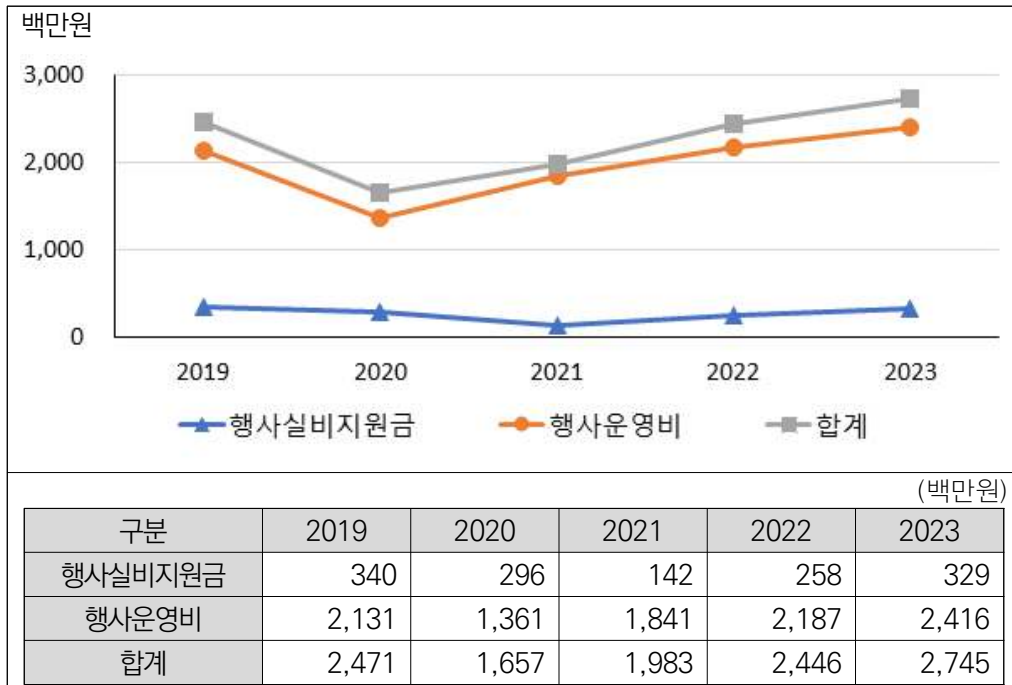
주) 사업수는 통계목 기준임

■ 부여군 행사성사업 예산 추이

- 행사성사업의 전체 예산은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2023년까지 증가하였음

- 2019년에 약 25억원 정도였으나 2020년에 약 17억원 정도로 감소
-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행사실비지원금은 큰 변화가 없었으나 행사운영비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함
- 행사운영비에 비해 행사실비지원금 규모가 작기 때문에 행사운영비의 증감이 행사사업 예산 전체 추이를 주도함

[그림 3-8] 부여군 행사성사업의 연도별 예산액



2) 현금성사업 예산 분석

■ 부여군 현금성사업 현황

- 2023년 예산 기준으로 부여군의 현금성사업을 살펴보면, 사업수는 126개 이고 그 중 기타보상금 사업이 102개, 사회보장적수혜금 사업이 23개임
- 예산을 살펴보면, 기타보상금이 약 95억원이고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약 32 억원으로 나타남
- 유형별 평균 사업예산액은 기타보상금이 약 93백만원이고, 사회보장적수혜금은 138백만원임

[표 3-18] 부여군 현금성사업 예산 현황(2023년 4회 추경예산 기준)

(개,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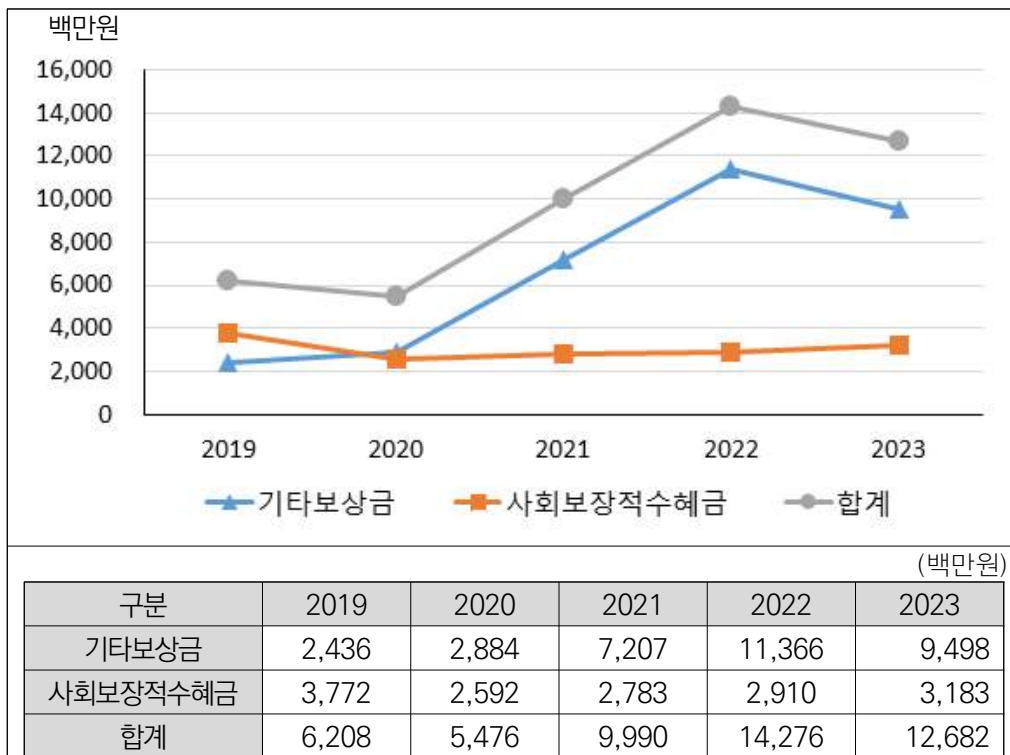
구분	사업수	예산액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기타보상금	102	9,498	93	310	0.2	2,616
사회보장적수혜금	23	3,183	138	285	0.5	1,224
전체	125	12,682	101	305	0.2	2,616

주) 사업수는 통계목 기준임

■ 부여군 현금성사업 예산 추이

- 현금성사업의 예산은 2020년 이후 2년 연속 증가한 후 2023년 감소함
 - 현금성사업 예산은 2022년에 약 143억원까지 증가한 후 2023년에 약 127억 원으로 다소 감소함
 - 5년간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나 기타보상금 예산이 크게 변동함
 - 기타보상금에 비해 사회보장적수혜금 규모가 작기 때문에 기타보상금의 증가가 행사성사업 예산 전체 추이를 주도함

[그림 3-9] 부여군 행사성사업의 연도별 예산액(2023년 4회 추경예산 기준)



3) 시설비 사업 예산 분석

■ 부여군 시설비 사업 현황

- 2023년 예산 기준으로 부여군의 시설비 사업을 살펴보면, 사업수는 1,029개이고 예산액은 약 1,133억원임
 - 2023년 4회 추경예산 기준으로 부여군의 세출(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계) 예산이 약 1조 484억원임
 - 자체사업 중 시설비는 부여군 세출예산의 10.8%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큰 규모임
- 부서별로 예산액을 살펴보면, 건설과의 예산이 약 448억원(34.1%)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상하수도사업소의 예산이 약 144억원(11%), 재무회계과의 예산이 약 143억원(10.9%), 전략사업과의 예산이 약 103억원(7.9%) 등의 순서로 나타남
 - 부서별 사업의 평균예산액을 보면, 전략사업과 사업의 평균액이 약 21억원으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재무회계과 사업의 평균액이 5억원, 농업정책과 사업의 평균액이 4억원 등의 순서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전략사업과, 재무회계과 등의 사업이 대규모사업임을 유추할 수 있도록 함

[표 3-19] 부여군 시설비사업 현황(2023년 4회 추경예산 기준)

(개, 백만원, %)

부서	사업수		예산액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개수	비율	금액	비율				
전체	1,029	100%	113,293	100%	110	372	0.2	8,000
가족행복과	11	1.1%	588	1%	53	61	11.6	230
건설과	396	38.5%	38,485	34%	97	258	2	2,400
경제교통과	29	2.8%	3,079	3%	106	132	0.2	678
굿드래경영과	10	1.0%	435	0%	43	35	5	100
농업기술센터	18	1.7%	1,508	1%	84	132	8	600
농업정책과	13	1.3%	4,316	4%	332	402	0.8	1,500
도시건축과	22	2.1%	4,935	4%	224	357	10	1,700
문화재과	13	1.3%	3,151	3%	242	455	15	1,550
문화체육관광과	33	3.2%	5,488	5%	166	483	5	2,822
보건소	6	0.6%	187	0%	31	36	3.6	111
사적관리소	6	0.6%	259	0%	43	28	18.8	100
사회복지과	8	0.8%	1,330	1%	166	348	5	1,081
산림녹지과	25	2.4%	2,563	2%	103	163	10	621
상하수도사업소	56	5.4%	12,577	11%	225	240	12	1,100
안전총괄과	31	3.0%	3,242	3%	105	103	3.9	378
자치행정과	4	0.4%	125	0%	31	15	10	50
재무회계과	25	2.4%	10,640	9%	426	924	10	4,600
전략사업과	5	0.5%	9,304	8%	1861	3,083	17	8,000
종합민원지적과	5	0.5%	498	0%	100	147	9.9	390
투자유치담당관	3	0.3%	180	0%	60	50	20	130
환경과	20	1.9%	3,619	3%	181	383	2	1,744
읍면	290	28.2%	6,784	6%	23	16	4	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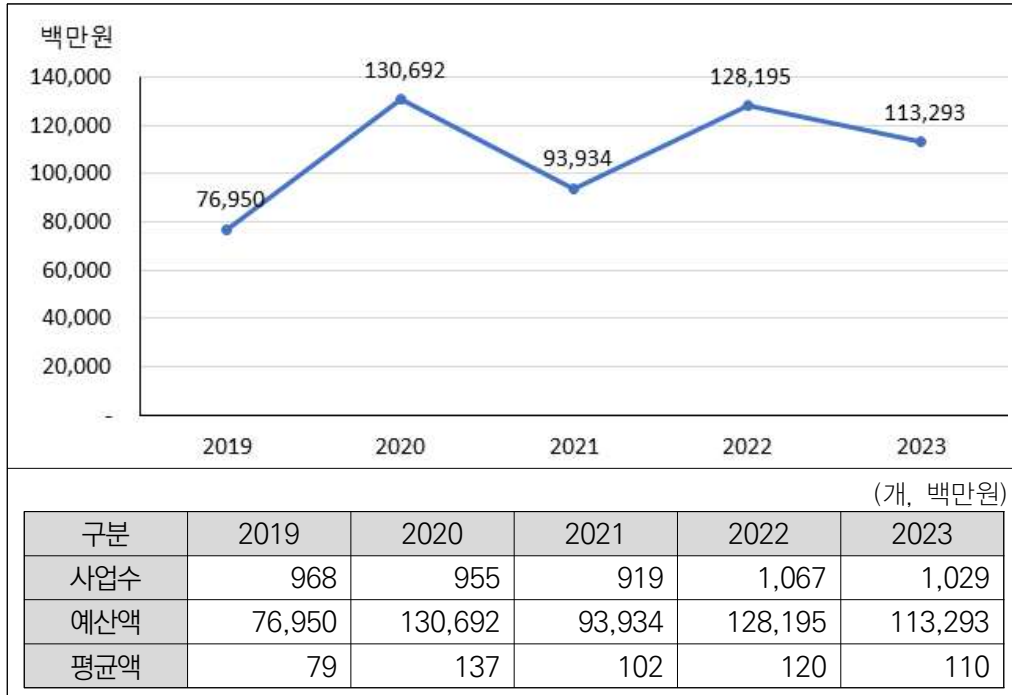
주) 사업수는 통계목 기준임

■ 부여군 시설비 사업 예산 추이

-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시설비 사업의 예산 추이를 보면, 등락을 반복함
 - 2020년 예산은 약 1,307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에서 약 537억원이 증가하여 약 69.8%의 증가율을 보임
 - 2021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약 368억원이 감소하였고, 2022년에는 다시 증가

하였으며, 2023년에는 다시 감소함

[그림 3-10] 부여군 시설비 사업의 연도별 예산액



■ 부여군 대규모 시설비 사업 예산 추이

- 10억원 이상의 대규모 시설비사업을 연도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음
-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연도별 대규모 시설비사업의 개수를 살펴 보면, 2021년에 27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23년에 22개, 2020년에 21개, 2021년에 19개임. 반면에 2019년에는 9개로 이후 연도에 비해 적음
- 5년간의 사업 중 매우 큰 규모로 추진된 사업은 2020년에 추진된 ‘부여 관북리 유적 정비(토지매입)’ 사업과 ‘부여 문화예술종합타운 조성’ 사업으로 각각 약 173억원과 153억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됨
 - 그 외에 2022년에 ‘부여 문화예술종합타운 조성’사업이 약 101억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됨
- 이상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시설비사업 예산의 증가는 일정부분 이러한 대규모 사업의 개수와 사업별 예산규모 때문임을 유추할 수 있음

[표 3-20] 부여군 연도별 대규모 시설비사업 목록(10억원 이상)

연번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세부사업명	예산액	세부사업명	예산액	세부사업명	예산액	세부사업명	예산액	세부사업명	예산액
1	면단위 하수처리장 확충	5,000	부여 관북리 유적 정비 (토지매입)	17,289	부여 문화예술종합타운 조성	5,231	부여 문화예술종합타운 조성	10,080	부여 문화예술교육타운 기반조성사업	8,000
2	하수관로정비사업	4,005	부여 문화예술종합타운 조성	15,312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 (전환사업)	2,792	소규모시설 유지보수	3,700	부여군청 주차장 매입 및 철거	4,600
3	백제예술인빌리지 조성사업	2,987	관광개발시설 유지관리 등	3,040	소규모시설 유지보수	2,500	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3,288	백미강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파크골프장, 유소년 야구장)	2,822
4	부여읍 도시계획도로 개설	1,993	면단위 하수처리장 확충	3,000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운영	2,383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 (전환사업)	2,770	군도4호(안서~가덕)도로 확포장공사	2,400
5	면단위 하수처리장 확충	1,300	가족행복센터 건립	2,744	소하천정비(전환사업)	2,010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2,575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 (전환사업)	1,900
6	청사관리 토지 매입	1,197	도시재생 계획 관리	2,300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1,962	청사 신축	2,000	벚마강 시설하우스 용수 공급사업(전환사업)	1,900
7	평생학습관 운영	1,165	소규모시설 유지보수	1,994	면단위 하수처리장 확충	1,936	도시재생 계획 관리	2,000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재활용물가능 폐기물 처리용역(1~8월)	1,744
8	가족행복센터 건립	1,164	부여읍 도시계획도로 개설	1,994	부여도심 상권활성화	1,744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운영	2,000	소부리 커뮤니티케어센터 인근 부지 매입비	1,700
9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운영	1,100	지방하천 정비사업(금강권역)	1,873	123사비 청년공예인 창작물러스터 구축	1,676	공공사업 추진 토지확보	1,900	소규모 수해시설 복구사업	1,653
10			하수관로정비사업	1,780	농촌생활환경정비(전환사업)	1,500	공공사업 추진 토지확보	1,800	서동공원 토지매입	1,550
11			지방하천 정비	1,700	청사수선 관리	1,495	청사 신축	1,794	가화소하천 정비사업(전환사업)	1,510
12			부여군 노인회관 신축 공사	1,594	옥산면체육관 건립	1,396	농촌생활환경정비(전환사업)	1,700	청년농 임대 및 실습교육용 스마트팜 매입	1,500
13			도시침수대응	1,500	항공레저스포츠 산업 육성 사업	1,317	부여읍 도시계획도로 개설	1,600	외산면행정복지센터 신축 부지 매입	1,430

(백만원)

연번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세부사업명	예산액	세부사업명	예산액	세부사업명	예산액	세부사업명	예산액	세부사업명	예산액
14			교정선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	1,495	유기농복합서비스단지 조성사업	1,260	소하천정비(전환사업)	1,512	의회청사 부지 매입	1,300
15			부여도심상권 활성화	1,292	부여 아름마을 조성	1,234	원도심 쌈지주차장 조성사업	1,310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	1,200
16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운영	1,200	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134	소규모수리시설 관리	1,291	지방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	1,200
17			부여 아름마을 조성	1,178	기초생활거점육성	1,118	소하천정비(전환사업)	1,285	해촌소하천 정비사업(전환사업)	1,126
18			부여도심 상권활성화	1,122	원도심 쌈지주차장 조성사업	1,110	스마트팜 김플렉스 지원센터 조성	1,250	상수도 누수탐사용역-기타면(14개면)	1,100
19			방치 폐기물 처리	1,089	제3청사 건립	1,040	백제역사 너울옛길(부여)	1,221	홍주의병 지티봉기 기념비 광장조성	1,081
20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067			상수도공사 민간대행	1,176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전환사업)	1,039
21			농촌생활환경정비(전환)	1,000			송국리유적 유적기념관 건립	1,000	유적 기념관 전여토지매입	1,000
22							서동공원관광자원화 추진	1,000	소규모 시설유지보수사업	1,000
23							서동공원 토지매입	1,000		
24							백제역사 너울옛길(부여)	1,000		
25							금강누정선유길	1,000		
26							석성~장암간 금강교 설치공사	1,000		
27							배수관로 정비	1,000		

■ 부여군 시설비 사업 특성 분석

- 시설비 사업 중 유지보수적 성격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조사함
 - 본 연구에서는 세부사업명에 운영, 유지, 관리가 포함된 경우, 산출내역에 보수, 교체로 기술된 경우, 재난에 따른 복구사업 경우를 유지보수적 성격으로 정의함
 - 예산서상 세부사업이나 산출근거에 기능보강, 보강 사업, 시설 설치로 기술된 경우에는 유지보수적 성격으로 분류하지 않음
- 시설비 사업 중 유지보수적 성격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업수 기준으로 53.5%, 예산액 기준으로 38.6%인 것으로 나타남
 - 시설비사업 예산이 많은 건설과의 경우 예산액 기준으로 59.6%가 유지보수적 성격의 사업인 것으로 나타남

[표 3-21] 유지보수성격 시설비사업 현황(2023년 4회 추경예산 기준)

(개, 백만원, %)

부서	유지보수사업 수		유지보수사업 예산액		전체 시설비 사업 개수	전체 시설비 사업 예산
	개수	비율	예산	비율		
가족행복과	6	54.5%	360	61.2%	11	588
건설과	248	62.6%	22,940	59.6%	396	38,485
경제교통과	12	41.4%	524	17.0%	29	3,079
굿뜨래경영과	0	0.0%	0	0.0%	10	435
농업기술센터	11	61.1%	415	27.5%	18	1,508
농업정책과	4	30.8%	631	14.6%	13	4,316
도시건축과	11	50.0%	1,099	22.3%	22	4,935
문화재과	6	46.2%	240	7.6%	13	3,151
문화체육관광과	13	39.4%	876	16.0%	33	5,488
보건소	4	66.7%	155	82.7%	6	187
사적관리소	4	66.7%	189	72.9%	6	259
사회복지과	4	50.0%	125	9.4%	8	1,330
산림녹지과	13	52.0%	850	33.2%	25	2,563
상하수도사업소	32	57.1%	7,850	62.4%	56	12,577
안전총괄과	9	29.0%	370	11.4%	31	3,242
자치행정과	1	25.0%	50	40.0%	4	125
재무회계과	6	24.0%	479	4.5%	25	10,640
전략사업과	1	20.0%	21	0.2%	5	9,304
종합민원지적과	2	40.0%	88	17.7%	5	498
투자유치담당관	2	66.7%	150	83.3%	3	180
환경과	8	40.0%	2,352	65.0%	20	3,619
읍면	154	53.1%	3,911	57.7%	290	6,784
총합계	551	53.5%	43,675	38.6%	1,029	113,293

주) 사업수는 통계목 기준임

3. 순군비사업 지출 개선과제

■ 순군비사업에 대한 평가 미흡

- 순군비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주요 재정사업평가제도가 있음에도,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인해 부여군에서는 주요 재정사업평가를 2017년 이후 실시하지 않음
- 사전심사나 사후평가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필요성이 낮거나 비효율적인 사업을 파악하지 못함
- 순군비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음

■ 행사성사업에 대한 관리 부재

- 부여군의 행사운영비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데, 별도의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효율적인 통제가 어려움
- 부여군의 행사축제경비 금액이나 비율이 전국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임을 고려하면 행사성사업 예산이 적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음
- 행사운영비가 적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관리가 요구됨

■ 사회보장적 수혜금 관리 불명확

-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지방보조금에 해당하는 민간이전의 통계목 중 ‘사회복지사업보조’ 사업과 명확한 구분이 어려움⁷⁾
-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보조사업자의 신청이나 요청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사업집행 후 별도의 평가절차가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상당한 자율성이 보장됨
-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복잡한 행정절차가 요구되는 지방보조금 보다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전환하려는 유인이 발생할 수 있음⁸⁾

■ 자부담 미적용

- 기타 보상금의 경우 사업의 직접적인 효과가 특정대상에게 한정된 경우가 있음

7) 이삼주·윤택섭, 2016: 127

8) 이삼주·윤택섭, 2016: 126

-
- 그럼에도 자기 부담금 기준이 없어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 시설비 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 필요

- 시설비 사업 중 약 38%는 필수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유지보수적 지출이므로 시설비 지출의 효율화는 신규투자적 지출과 유지보수적 지출을 구분하여 접근 필요
- 시설비 증가는 대규모 투자사업이나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주민편의 시설 신축 사업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그에 따라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주민편의시설 신축과 같은 비필수적 사업지출에 대한 효율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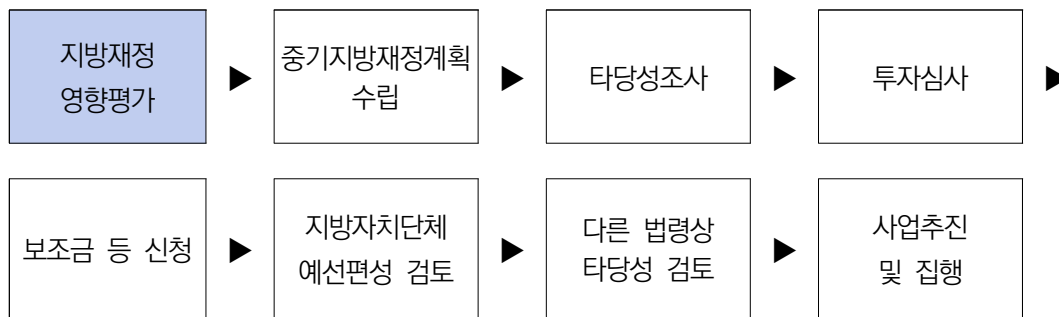
제4절 국·도비사업예산 운영 분석

1. 지방재정영향평가 제도 운영 현황

■ 지방재정영향평가 제도의 의의

-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란 대규모의 지방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해 사전에 지방비 부담의 필요성 보조율 산정근거의 합리성 등을 통해 재원 부담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제도임
- “지방재정영향평가는 예산편성 이전에 실행되는 사전적 지방재정관리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에 대규모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전에 그 사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자체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임”(오나래, 2023: 3)
-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는 대규모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공모사업 또는 행사성 사업추진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영향평가제도임

[그림 3-11] 재정사업의 추진 절차상 지방재정영향평가 순서



자료: 오나래,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 2023. p.12.

■ 지방재정영향평가의 분류

- 지방재정영향평가는 ①지방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영향평가와 ②국가사업에 대한 중앙관서의 지방재정영향평가로 구분됨
-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규모 이상의 행사성 사업과 공모사업의 유치를 신청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회가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추진의 적정성을 심사함

- 중앙관서에서 실시하는 평가는 중앙관서가 “대규모 지방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중앙관서의 세입·세출 및 국고채무 부담행위의 요구안 중 지방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인 지방재정영향평가서를 행안부장관에 제출함”(오나래, 2023: 11)

■ 지방재정영향평가의 대상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5조의5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가하여야 하는 평가대상은 다음과 같음
 - 국내·국제경기대회 및 공연·축제 등의 행사성 사업으로서, 시·도의 경우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사업과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사업
 - 공모사업 등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50억원 이상인 사업
 - 광역자치단체가 공모하는 100억원 이상 사업에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이 50억 이상인 경우 기초자치단체가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공모
 -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각각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부담분에 대해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심사한 후 사업에 공모함
 - 예를 들어, A부가 공모한 B사업에 C도와 D군이 공동으로 국비 60억원, C도 30억원, D군 30억원(총사업비 120억원, 지방재정 부담 60억원)의 사업을 계획하여 응모할 경우 C도와 D군 모두 개별적으로 C도와 D군의 재정 부담분에 대하여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응모
- 중앙관서의 평가대상 국가사업은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으로 지방재정 부담이 1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과 총사업비와 지방비 부담이 전년대비 각각 20퍼센트 이상 증액되는 사업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매년 또는 격년으로 개최하는 반복적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으로서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에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
 - 단, 총사업비가 전년(격년으로 시행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전전년도)을 말한다)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사업은 제외함

- 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하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국가·지방 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 등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행안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은 평가대상 사업에서 제외함⁹⁾

■ 지방재정영향평가의 절차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영향평가와 중앙관서의 지방재정영향평가는 상이한 절차로 진행됨
-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영향평가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기 이전에, 공모사업 등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하기 전에 실시됨
 - 단, 긴급히 국가정책사업을 추진하거나 그 해에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회계연도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의 지방재정영향평가서 서식을 작성한 후 지방재정영향평가 자체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함
-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여 판정을 내림
 -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평가대상 사업의 재원규모 및 재원 조달 계획, 재정에 미치는 영향의 적정성, 사후 소요예상액의 적정성 등에 대해 의견을 작성함
- 평가에 대한 판정은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부적정의 4단계로 구분하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위원의 서명 및 의견을 받는 것으로 이루어짐
- 다음으로, 국가사업에 대한 평가절차는 중앙관서의 장이 행안부장관에 지방재정영향평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필요한 경우 행안부장관이 전문가 자문을 받거나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음
- 지방재정영향평가에 대한 판정은 지방사업의 경우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국가사업의 경우는 지방재정영향평가 관련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짐(오나라, 2023: 14)

9) 지방재정영향평가 면제사업 고시[시행 2017.7.26.][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 2017.7.26. 타법개정]

■ 지방재정영향평가의 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영향평가는 우선 「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의 지방재정영향평가서 서식 작성으로 시작되는데, 사업에 투입되는 재원의 소요를 정리한 후 자치단체의 가용자원 현황을 정리하여 신규가용자원을 산출함
- 이를 통해 신규가용자원 대비 사업비의 비율을 도출하여 자원부담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재정영향평가서 서식을 작성한 후 지방재정영향평가 자체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데,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음

[표 3-22]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영향평가 자체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 배점	평가 결과	평점 사유
사업계획의 적정성 (15)	1-1. 사업 내용이 사업 목표달성을 위해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지?	5		
	1-2. 사업절차를 준수하였는지?	5		
	1-3. 다른 사업과 유사·중복 사업은 아닌지?	5		
	소계	15		
재정여건 분석 (10)	2.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유형 평균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	10		
	소계	10		
자원부담의 적정성 (50)	3-1. 사업규모 및 소요자원 산출이 명확하며 자원 배분이 적절한지?	20		
	3-2. 신규가용자원 대비 사업비가 적절한지?	20		
	3-3. 사후 소요 예산액이 적절한지?	10		
	소계	50		
자원조달 가능성 (25)	4. 지방비 부담액이 자원 조달 가능한 수준인지?	25		
	소계	25		
합계		100		

자료: 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 별표

- 자체평가 기준의 평가항목은 크게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정여건분석, 자원부담의 적정성, 자원조달가능성의 4가지로 구성되고 항목별 배점은 15점,

10점, 50점, 25점으로 구성됨

- 재원부담의 적정성 항목의 배점이 50점으로 가장 크게 설정됨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가 완료되면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여 판정을 내림
 -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는 지방비 부담의 필요성, 국고보조율 산정근거의 합리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규모 및 변화율 적정성 등에 대해 실시됨
- 평가에 대한 판정은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부적정의 4단계로 구분하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위원의 서명 및 의견을 받는 것으로 이루어짐
 - 적정: 재원 규모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지방비 부담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 조건부 추진: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고, 사업 추진 필요성 등이 충족되어야 하는 경우
 - 재검토: 지방재정 부담 등 사업 추진계획 등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 부적정: 재원 규모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미흡하여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되는 경우

2. 국·도비 예산 분석

■ 국·도비사업 예산 현황

- 2023년 4회 추경예산 기준으로 부여군의 국·도비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사업수는 1,811개이고 예산액은 약 5,694억원임
 - 국·도비사업 예산은 부여군 2023년 세출예산(일반,특별회계), 약 1조 484억원의 54.3%를 차지함
- 부서별로 예산액을 살펴보면, 가족행복과의 예산이 약 1,177억원(20.7%)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건설과의 예산이 약 1,056억원(18.6%), 농업정책과의 예산이 약 687억원(12.1%), 문화재과의 예산이 약 516억원(9.1%) 등의 순서로 나타남
 - 부서별 사업의 평균예산액을 보면, 상하수도사업소 사업의 평균액이 약 9억원으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도시건축과 사업의 평균액이 약 8억원, 전략사업과 사

업의 평균액이 6억원 등의 순서로 나타남

- 이를 통해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건축과 등의 사업이 대규모사업임을 유추할 수 있음

- 국도비사업 중 최대규모 사업의 예산은 약 661억원이고 최소규모 사업의 예산은 20만원 수준임

[표 3-23] 부여군 국도비사업 예산 현황(2023년 4회 추경예산 기준)

(개, 백만원, %)

부서	사업수		예산액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개수	비율	금액	비율				
전체	1,811	100%	569,370	100%	314	2,267	0.2	66,122
가족행복과	203	11.2%	117,740	20.7%	580	4,764	0.2	66,122
건설과	224	12.4%	105,639	18.6%	472	3,918	0.3	52,668
경제교통과	68	3.8%	22,419	3.9%	330	1,010	0.2	5,660
굿드래경영과	40	2.2%	4,342	0.8%	109	200	0.4	1,008
기획감사담당관	12	0.7%	556	0.1%	46	76	0.4	279
농업기술센터	173	9.6%	6,848	1.2%	40	70	0.5	447
농업정책과	122	6.7%	68,691	12.1%	563	1,461	1.9	11,575
도시건축과	29	1.6%	23,938	4.2%	825	1,947	2.8	10,000
문화재과	146	8.1%	51,641	9.1%	354	1,370	0.2	15,863
문화체육관광과	65	3.6%	8,465	1.5%	130	339	1.5	2,352
보건소	70	3.9%	8,399	1.5%	120	345	0.2	2,169
사적관리소	18	1.0%	1,130	0.2%	63	51	0.5	170
사회복지과	110	6.1%	32,612	5.7%	296	1,343	1.4	13,046
산림녹지과	187	10.3%	29,812	5.2%	159	422	0.4	3,261
상하수도사업소	31	1.7%	29,589	5.2%	954	1,482	0.9	4,643
안전총괄과	52	2.9%	12,847	2.3%	247	803	0.5	5,446
자치행정과	45	2.5%	1,019	0.2%	23	27	0.2	136
재무회계과	12	0.7%	492	0.1%	41	63	0.8	185
전략사업과	8	0.4%	5,077	0.9%	635	1,026	8.0	3,298
종합민원지적과	19	1.0%	1,530	0.3%	81	158	2.1	601
축수산과	122	6.7%	13,660	2.4%	112	436	0.5	4,750
투자유치담당관	7	0.4%	1,064	0.2%	152	212	20.0	640
환경과	48	2.7%	21,860	3.8%	455	1,276	1.5	7,718

주) 사업수는 통계목 기준임

■ 국비사업 예산 현황

- 국비사업 예산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사업수는 655개이고 예산액은 약

3,648억원임

- 국비사업 예산은 부여군 2023년 세출예산(일반,특별회계), 약 1조 484억원의 34.8%를 차지함
- 부서별로 예산액을 살펴보면, 가족행복과의 예산이 약 934억원(25.6%)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건설과의 예산이 약 905억원(24.8%), 문화재과의 예산이 약 463억원(12.7%), 사회복지과의 예산이 약 283억원(7.8%) 등의 순서로 나타남
- 부서별 사업의 평균예산액을 보면, 건설과 사업의 평균액이 약 57억원으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가족행복과 사업의 평균액이 약 20억원, 상하수도사업소 사업의 평균액이 9억원 등의 순서로 나타남
- 이를 통해 국비사업은 건설과, 가족행복과 등의 사업이 대규모사업임을 유추할 수 있음
- 국비사업 중 최대규모 사업의 예산은 약 661억원이고 최소규모 사업의 예산은 20만원 수준임

[표 3-24] 부여군 국비사업 예산 현황(2023년 4회 추경예산 기준)

(개, 백만원, %)

부서	사업수		예산액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개수	비율	금액	비율				
전체	655	100%	364,763	100%	557	3,643	0.2	66,122
가족행복과	46	7.0%	93,452	25.6%	2,032	9,819	1.0	66,122
건설과	16	2.4%	90,531	24.8%	5,658	13,630	9.0	52,668
경제교통과	12	1.8%	738	0.2%	62	71	2.0	228
굿드래경영과	7	1.1%	161	0.0%	23	24	2.0	80
농업기술센터	102	15.6%	2,867	0.8%	28	44	0.7	210
농업정책과	26	4.0%	17,634	4.8%	678	1,315	2.5	6,375
도시건축과	11	1.7%	4,259	1.2%	387	576	2.8	1,848
문화재과	116	17.7%	46,295	12.7%	399	1,522	0.2	15,863
보건소	26	4.0%	5,945	1.6%	229	528	0.6	2,169
사적관리소	18	2.7%	1,130	0.3%	63	51	0.5	170
사회복지과	45	6.9%	28,318	7.8%	629	2,050	1.4	13,046
산림녹지과	106	16.2%	22,948	6.3%	216	536	0.4	3,261
상하수도사업소	15	2.3%	13,518	3.7%	901	1,395	3.5	3,928
안전총괄과	18	2.7%	7,888	2.2%	438	1,266	0.6	5,446
자치행정과	9	1.4%	217	0.1%	24	31	0.2	93
재무회계과	10	1.5%	379	0.1%	38	66	0.8	185
전략사업과	2	0.3%	53	0.0%	27	19	8.0	45
종합민원지적과	14	2.1%	697	0.2%	50	113	2.1	445
축수산과	25	3.8%	6,890	1.9%	276	921	0.8	4,750
환경과	31	4.7%	20,843	5.7%	672	1,545	1.7	7,718

주) 사업수는 통계목 기준임

■ 균특회계사업 예산 현황

- 균특회계사업 예산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사업수는 127개이고 예산액은 약 474억원임
 - 균특회계사업 예산은 부여군 2023년 세출예산(일반,특별회계), 약 1조 484억원의 4.5%를 차지함

[표 3-25] 부여군 균특회계사업 예산 현황(2023년 4회 추경예산 기준)

(개, 백만원, %)

부서	사업수		예산액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개수	비율	금액	비율				
전체	127	100%	47,403	100%	373	866	0.4	5,660
가족행복과	48	37.8%	7,017	14.8%	146	631	1.1	4,403
건설과	1	0.8%	210	0.4%	210	0	210.0	210
경제교통과	18	14.2%	7,499	15.8%	417	1,281	0.5	5,660
굿뜨래경영과	3	2.4%	86	0.2%	29	38	0.4	82
농업기술센터	3	2.4%	600	1.3%	200	184	3.2	447
농업정책과	16	12.6%	11,549	24.4%	722	476	221.0	1,790
도시건축과	10	7.9%	6,649	14.0%	665	1,247	3.3	4,212
문화체육관광과	2	1.6%	1,330	2.8%	665	535	130.0	1,200
보건소	3	2.4%	438	0.9%	146	98	8.0	230
사회복지과	13	10.2%	1,576	3.3%	121	181	4.6	695
산림녹지과	4	3.1%	897	1.9%	224	374	4.0	872
상하수도사업소	1	0.8%	3,250	6.9%	3,250	0	3,250.0	3,250
안전총괄과	3	2.4%	2,804	5.9%	935	586	400.0	1,750
전략사업과	1	0.8%	3,298	7.0%	3,298	0	3,298.4	3,298
환경과	1	0.8%	200	0.4%	200	0	200.0	200

주) 사업수는 통계목 기준임

- 부서별로 예산액을 살펴보면, 농업정책과의 예산이 약 115억원(24.4%)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제교통과의 예산이 약 75억원(15.8%), 가족행복과의 예산이 약 70억원(14.8%), 도시건축과의 예산이 약 66억원(14.0%) 등의 순서로 나타남
 - 부서별 사업의 평균예산액을 보면, 전략사업과 사업의 평균액이 약 33억원으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사업의 평균액이 약 33억원, 안전총괄과 사업의 평균액이 9억원 등의 순서로 나타남
 - 이를 통해 균특회계사업은 전략사업과, 상하수도사업소 등의 사업이 대규모사업임을 유추할 수 있음
- 균특회계사업 중 최대규모 사업의 예산은 약 57억원이고 최소규모 사업의 예산은 40만원 수준임

■ 도비사업 예산 현황

- 도비사업 예산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사업수는 1,029개이고 예산액은 약 1,572억원임
- 도비사업 예산은 부여군 2023년 세출예산(일반,특별회계), 약 1조 484억원의 15.0%를 차지함

[표 3-26] 부여군 도비사업 예산 현황(2023년 4회 추경예산 기준)

(개, 백만원, %)

부서	사업수		예산액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개수	비율	금액	비율				
전체	1,029	100%	157,203	100%	153	665	0.2	11,575
가족행복과	109	10.6%	17,270	11.0%	158	502	0.2	3,832
건설과	207	20.1%	14,898	9.5%	72	104	0.3	600
경제교통과	38	3.7%	14,182	9.0%	373	1,009	0.2	4,655
굿뜨래경영과	30	2.9%	4,096	2.6%	137	224	3.5	1,008
기획감사담당관	12	1.2%	556	0.4%	46	76	0.4	279
농업기술센터	68	6.6%	3,381	2.2%	50	82	0.5	420
농업정책과	80	7.8%	39,508	25.1%	494	1,623	1.9	11,575
도시건축과	8	0.8%	13,030	8.3%	1,629	3,225	10.0	10,000
문화재과	30	2.9%	5,346	3.4%	178	376	0.6	1,773
문화체육관광과	63	6.1%	7,135	4.5%	113	317	1.5	2,352
보건소	41	4.0%	2,015	1.3%	49	113	0.2	635
사회복지과	52	5.1%	2,718	1.7%	52	89	1.5	339
산림녹지과	77	7.5%	5,968	3.8%	78	135	0.4	940
상하수도사업소	15	1.5%	12,820	8.2%	855	1,493	0.9	4,643
안전총괄과	31	3.0%	2,155	1.4%	70	137	0.5	700
자치행정과	36	3.5%	802	0.5%	22	26	0.6	136
재무회계과	2	0.2%	113	0.1%	56	47	9.1	104
전략사업과	5	0.5%	1,725	1.1%	345	179	125.0	600
종합민원지적과	5	0.5%	833	0.5%	167	221	24.0	601
축수산과	97	9.4%	6,770	4.3%	70	110	0.5	702
투자유치담당관	7	0.7%	1,064	0.7%	152	212	20.0	640
환경과	16	1.6%	817	0.5%	51	66	1.5	225

주) 사업수는 통계목 기준임

- 부서별로 예산액을 살펴보면, 농업정책과의 예산이 약 395억원(25.1%)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가족행복과의 예산이 약 173억원(11.0%), 건설

과의 예산이 약 149억원(9.5%), 경제교통과의 예산이 약 142억원(9.0%) 등의 순서로 나타남

- 부서별 사업의 평균예산액을 보면, 도시건축과 사업의 평균액이 약 16억원으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상수도사업소 사업의 평균액이 약 8억원, 농업정책과 사업의 평균액이 5억원 등의 순서로 나타남
- 이를 통해 도비사업은 도시건축과, 상수도사업소 등의 사업이 대규모사업임을 유추할 수 있음
- 도비사업 중 최대규모 사업의 예산은 약 116억원이고 최소규모 사업의 예산은 20만원 수준임

■ 국·도비사업 군비부담 현황

- 부여군은 2023년 4회 추경예산 기준으로 국·도비사업 수행에 약 1,413억원의 군비를 부담함
 - 전체 국·도비사업 예산 약 5,694억원의 24.8%를 군비로 부담함
- 부서별로 군비부담액 현황을 살펴보면, 농업정책과의 군비부담 예산이 약 282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가족행복과의 군비부담 예산이 약 250억원, 경제교통과의 군비부담 예산이 약 126억원, 문화재과의 군비부담 예산이 약 95억원 등의 순서로 나타남
- 부서별로 군비부담률 현황을 살펴보면, 재무회계과의 군비부담률이 65.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자치행정과의 군비부담률이 59.6%, 경제교통과의 군비부담률이 56.3%, 굿뜨래경영과의 군비부담률이 56.2% 순서로 나타남
 - 반면, 건설과의 군비부담률은 6.8%로 가장 낮고, 안전총괄과의 군비부담률이 8.3%, 투자유치담당관의 군비부담률이 9.2%로 낮게 나타남
- 사업별 군비부담률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44.4%로 나타났고, 최대값은 93.9%, 최소값은 0%로 나타남
 - 부서별로 사업별 군비부담률을 살펴보면, 축수산과의 사업별 군비부담률 평균값은 60.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자치행정과의 사업별 군비부담률 평균값이 55.1%, 재무회계과의 사업별 군비부담률 평균값이 54.4%로 높게 나타남
- 부서별 군비부담률과 사업별 군비부담률 평균값은 상이한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한 부서의 사업별 군비부담률 차이가 크기 때문임

[표 3-27] 부여군 국·도비사업 군비 부담 현황(2023년 4회 추경예산 기준)

(백만원, %)

부서	사업 예산액	군비부담액	군비 부담률	사업별 군비부담률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전체	569,370	141,295	24.8%	44.4%	23.5%	0.0%	93.9%
가족행복과	117,740	24,968	21.2%	46.7%	25.2%	0.0%	85.0%
건설과	105,639	7,156	6.8%	46.5%	13.8%	0.0%	70.0%
경제교통과	22,419	12,618	56.3%	45.7%	24.9%	0.0%	93.9%
굿드래경영과	4,342	2,440	56.2%	54.2%	18.7%	0.0%	90.2%
기획감사담당관	556	139	25.0%	35.8%	26.9%	0.0%	70.0%
농업기술센터	6,848	3,578	52.2%	51.9%	14.9%	0.0%	83.7%
농업정책과	68,691	28,246	41.1%	50.8%	24.0%	0.0%	88.2%
도시건축과	23,938	4,177	17.4%	27.3%	22.3%	0.0%	70.0%
문화재과	51,641	9,551	18.5%	25.7%	17.2%	0.0%	70.0%
문화체육관광과	8,465	3,501	41.4%	52.2%	17.2%	0.0%	90.9%
보건소	8,399	1,689	20.1%	47.8%	26.2%	0.0%	85.0%
사적관리소	1,130	170	15.0%	15.0%	0.0%	15.0%	15.0%
사회복지과	32,612	5,999	18.4%	38.6%	29.3%	0.0%	86.4%
산림녹지과	29,812	9,195	30.8%	39.8%	21.8%	0.0%	93.0%
상하수도사업소	29,589	6,201	21.0%	25.4%	21.5%	0.0%	89.6%
안전총괄과	12,847	1,067	8.3%	31.3%	29.2%	0.0%	74.0%
자치행정과	1,019	607	59.6%	55.1%	24.0%	0.0%	87.2%
재무회계과	492	320	65.2%	54.4%	9.6%	50.0%	84.1%
전략사업과	5,077	1,130	22.3%	36.0%	17.7%	0.0%	50.0%
종합민원지적과	1,530	576	37.6%	42.6%	26.6%	0.0%	70.0%
축수산과	13,660	6,893	50.5%	60.6%	20.4%	0.0%	92.6%
투자유치담당관	1,064	98	9.2%	37.1%	32.8%	0.0%	70.0%
환경과	21,860	10,978	50.2%	45.2%	19.3%	0.0%	85.6%

■ 보조사업 유형별 군비부담 비교

- 보조사업 유형별로 군비부담액과 부담률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음
- 국비사업, 군특회계사업, 도비사업의 군비부담액은 각각 522억원, 102억원, 789억원 수준으로 도비사업의 군비부담액이 가장 크게 나타남
- 국비사업, 군특회계사업, 도비사업의 군비부담률은 각각 14.3%, 21.5%, 50.2%로 도비사업의 군비부담률이 가장 크게 나타남

- 도비사업의 예산액이 국비사업의 절반에 미치지 못함에도, 도비사업의 군비부담액이 가장 큰 이유는 도비사업의 군비부담률이 국비사업보다 3배 이상 크기 때문임
- 사업별 군비부담률 평균값을 사업유형별로 비교하면, 국비사업은 27.4%, 균특회계사업은 27.3%, 도비사업은 57.4%로 나타나 도비사업의 군비부담률 평균값이 가장 크게 나타남

[표 3-28] 부여군 보조사업 유형별 군비부담 현황(2023년 4회 추경예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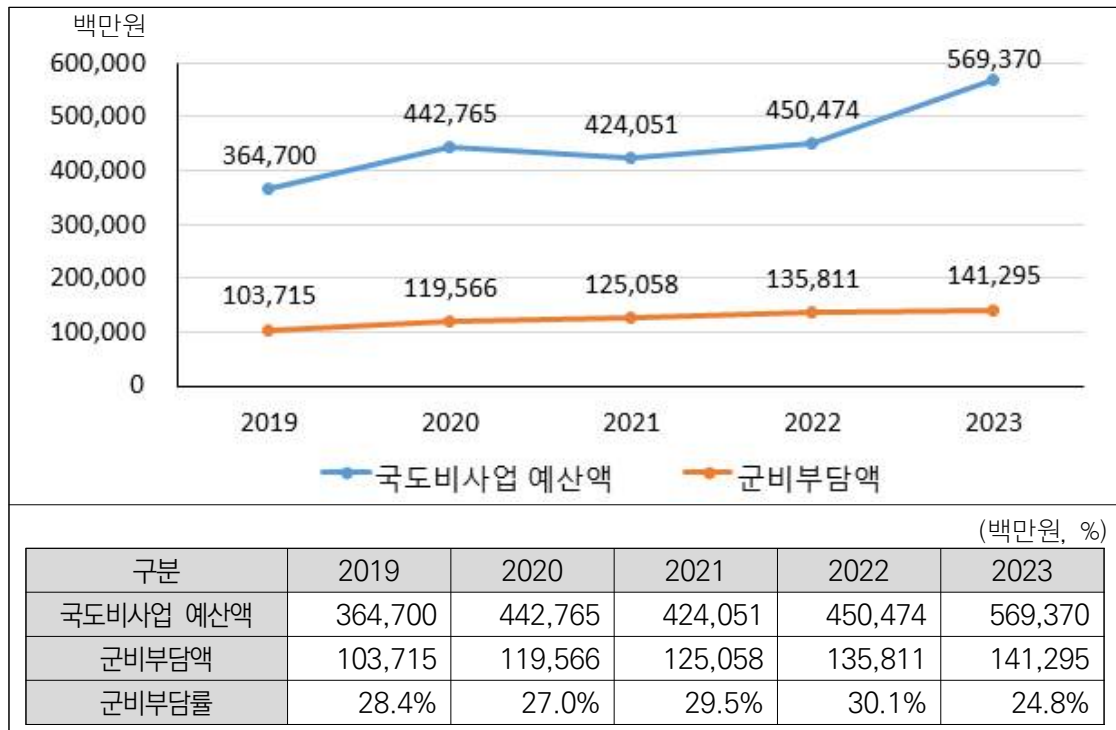
(백만원, %)

부서	예산액	군비부담액	군비부담률	사업별 군비부담률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전체	569,370	141,295	24.8%	44.4%	23.5%	0.0%	93.9%
국비사업	364,763	52,221	14.3%	27.4%	17.8%	0.0%	89.7%
균특회계사업	47,403	10,197	21.5%	27.3%	15.7%	0.0%	87.1%
도비사업	157,203	78,877	50.2%	57.4%	18.7%	0.0%	93.9%

■ 국·도비사업 군비부담 추이

- 부여군 국·도비사업의 군비부담액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임
- 다만, 국·도비사업 예산액은 크게 변동됨에도 군비부담액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그에 따라 연도별 군비부담률의 변동이 크게 나타남
 - 2019년에는 28.4%였으나 2020년에는 27%로 감소함. 2022년까지 증가한 후 2023년에는 24.8%로 크게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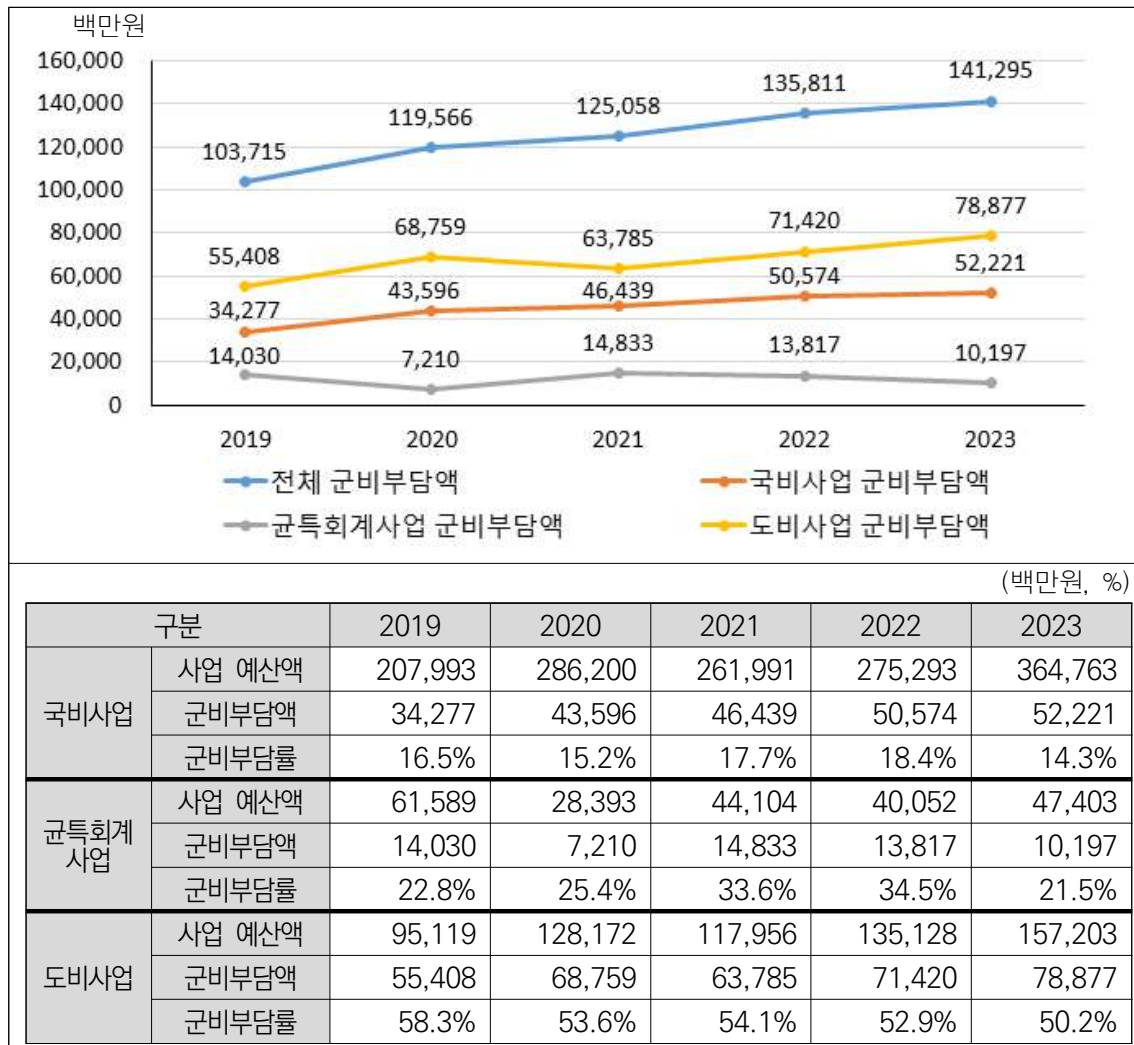
[그림 3-12] 부여군 국도비사업의 군비부담 추이



■ 보조사업 유형별 군비부담 추이

- 국도비사업을 국비사업, 군특회계사업, 도비사업으로 구분하여 군비부담 추이를 살펴봄
- 우선 군비부담액을 살펴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 5년간 도비사업 군비부담액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국비사업 군비부담액, 군특회계사업 군비부담액이 가장 많음
 - 국비사업 군비부담액은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임
 - 군특회계사업 군비부담액은 2021년에만 증가하였고,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임
 - 반면, 도비사업 군비부담액은 2021년에 감소하였고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임
- 군비부담률은 국비사업이 20% 미만으로 유지되었고, 군특회계사업이 20%대와 30%대 사이에서 변동이 크게 나타났으며, 도비사업이 50%대를 유지함

[그림 3-13] 부여군 국도비사업의 군비부담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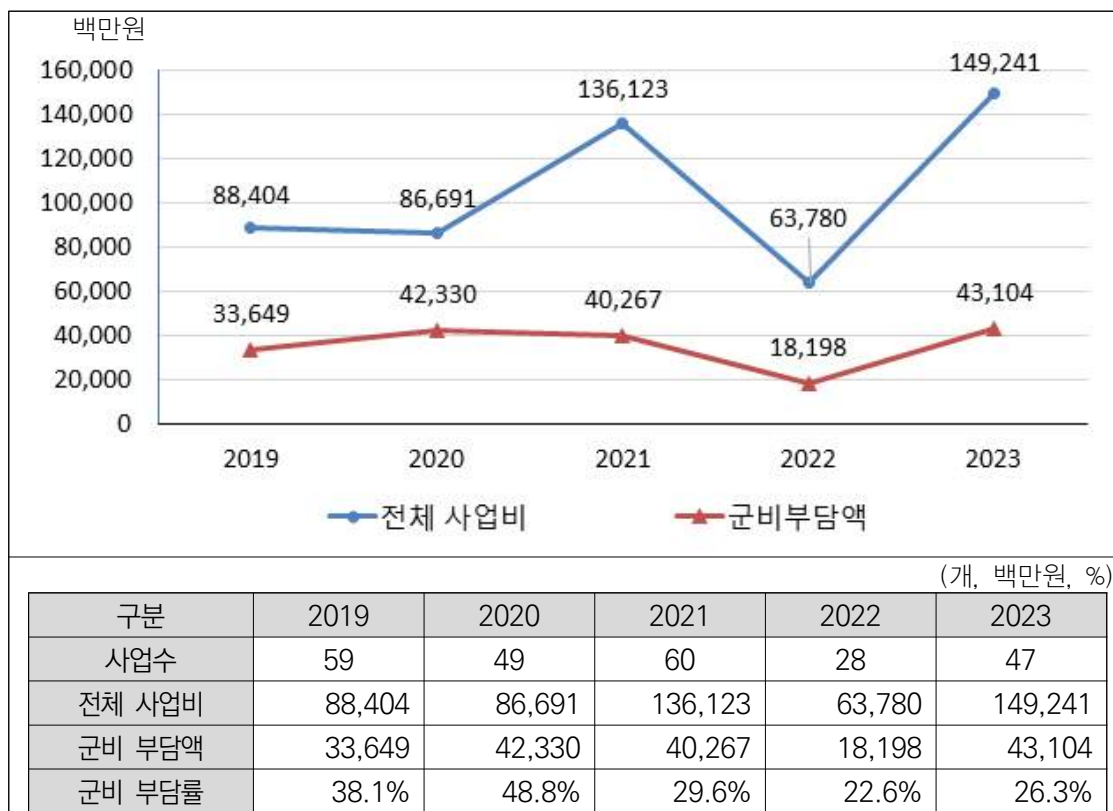


■ 공모사업 분석

- 부여군의 공모사업은 2023년 기준으로 47개 사업에 1,492억원 규모이고 군비부담액은 431억원이며, 군비부담률은 26.3%임
- 이러한 군비부담액은 2023년 국도비사업 군비부담액 약 1,413억원에 비교하면, 30% 수준으로 매우 큰 규모임
- 즉, 공모사업은 부여군 자주재원에 부담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의 공모사업 건수와 전체 사업비는 변동이 매우 크게 나타남

- 공모사업의 전체사업비는 2021년에 크게 증가한 이후 2022년에 매우 큰 폭으로 감소함. 이후 2023년에 큰 폭으로 증가함
-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의 공모사업의 군부부담액은 전체 사업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동 폭이 크지 않음

[그림 3-14] 부여군 공모사업 추이



주) 2022년, 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제외

3. 국도비사업 지출 개선과제

■ 국도비사업에 대한 관리체계 미흡

- 중앙정부 또는 충청남도가 지원하는 보조사업은 재정이 열악한 부여군이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군비부담액이 지나치게 증가할 경우 군 자체적으로 수립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게 될 수 있음

- 따라서 국도비사업에서 중요한 점은 필요성 및 타당성 높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군비부담 수준을 최대한 줄이며, 반대로 필요성 및 타당성이 낮은 사업은 추진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것임
- 이를 위해서는 국도비사업의 계획단계 또는 추진이후 단계에서 평가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부여군에서는 이러한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지방재정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

- 지방재정부담을 유발하는 행사성사업과 공모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방재정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그 동안 의무화되지 않아 잘 활용되지 않음
- 그러나 2024년부터 지방재정영향평가가 의무화되었고, 2023년 말에 관련 법규 개정을 통해 평가대상사업의 사업비규모를 축소하여 평가대상범주가 확대됨
 - 평가대상이 되는 행사성사업의 경우 기존 사업비가 30억원이었으나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10억원으로 하향함
- 그럼에도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지방비부담 50억원 기준은 부여군과 같이 열악한 재정 여건하에 있는 자치단체에 실효성이 크지 않음
- 부여군이 2023년에 유치한 47개 공모사업 중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은 3개에 불과하고, 2022년에는 2개에 불과함
 - 2023년도 공모사업 중 안전총괄과의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2건과 상하수도사업소의 '2023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임
 - 2022년도 공모사업 중 농업정책과의 '농촌협약' 사업과 '농촌공간정비사업' 사업임

■ 도비사업의 적절성 검토 미흡

- 도비사업의 총사업비 규모는 국비사업보다 작지만 50% 이상의 높은 군비부담률로 인해 가장 많은 군비부담액을 발생시킴
- 도비사업의 필요성, 사업효율성 및 효과 등을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사업

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폐지

■ 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 미흡

- 공모사업은 부여군이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사업이 아닌 선택사항이므로,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함
- 그러나 부여군의 사업부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공모에 참여하여 사업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음

제4장

부여군 세출효율화 방안

제1절 기본 방향

제2절 지방보조사업예산 효율화 방안

제3절 순군비사업예산 효율화 방안

제4절 국·도비사업예산 효율화 방안

제1절 기본 방향

■ 방향 설정

- 본 연구는 부여군 세출효율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즉, 비효율적인 사업을 선별하여 예산삭감, 통폐합, 일몰 처리하고, 필요성이 낮거나 비효율적인 신규사업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 일률적인 예산 삭감 등의 방식은 반발을 줄일 수 있지만, 효율적인 자원 배분의 입장에서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나라살림연구소, 2023)
- 기본적으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삭감 또는 폐지하고, 유사·중복 사업은 다른 사업과 통합하는 방향으로 하되, 사업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방안 적용함

■ 기존 평가제도 활용

-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효율적이고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해 다양한 평가제도들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제도를 제안하기 보다 기존에 도입된 제도를 개선하거나 활성화하는 방안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세출효율화를 위해 기존 제도의 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함
- 어떠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추가적인 업무부담이 발생하고 사전에 예상하지 못한 부가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등 제도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여러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임

■ 예산사업에 대한 평가 강화

- 지방보조사업뿐만 아니라 순군비사업에 대해 사전, 사후평가를 실시함
- 신규 사업을 계획 단계에서 평가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후 운영평가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효과성을 검토하여 비효율적인 사업을 퇴출하거나 효율화시키도록 함

■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

- 앞의 부여군 재정진단 결과,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관리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검토에서는 유사중복사업 통제가 세출효율화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부분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상대평가 방식 적용

- 부여군은 지방보조사업 평가에서 절대평가 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평가의 관대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로 인해 사업 및 예산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방보조사업 평가에 상대평가방식을 적용하도록 제안하고, 순군비사업에 대한 평가에도 제안함
- 이러한 상대평가 방식 적용은 중앙정부의 지방보조금 관리기조에 부합하는 조치임
 - 행정안전부는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서 향후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개정하여 사업별 상대평가 실시를 예고함

■ 총액한도 운영

- 특정 분야의 예산의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해당 분야의 예산 총액을 제한하는 것임
-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의 무분별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자치단체별 총액한도제를 운영하고 있음
- 부여군에서는 지방보조사업예산과 순군비사업예산에서 모두 행사축제성 경비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 행사축제성 경비에 대해서는 총액한도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자부담 강화

- 보조사업 또는 지원사업 성격의 예산사업 특정 주민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일정 비율 자부담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즉, 사업의 수혜대상이 특정 주민으로 제한되는 민간자본사업보조과 일부 기타보상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부담을 의무화하고 사회복지와 같이 공공성이 강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적용함

■ 타당성 검토 강화

- 대규모사업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업의 실시단계에서 필요성, 목적, 사업의 효과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중요함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검증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기본방향 정리

- 부여군 세출효율화의 주요 방향을 정리하면 사업평가 강화, 자체 총액한도제 운영, 자부담 강화, 타당성 검토 강화임

[그림 4-1] 부여군 세출 효율화 방향



제2절 지방보조금 효율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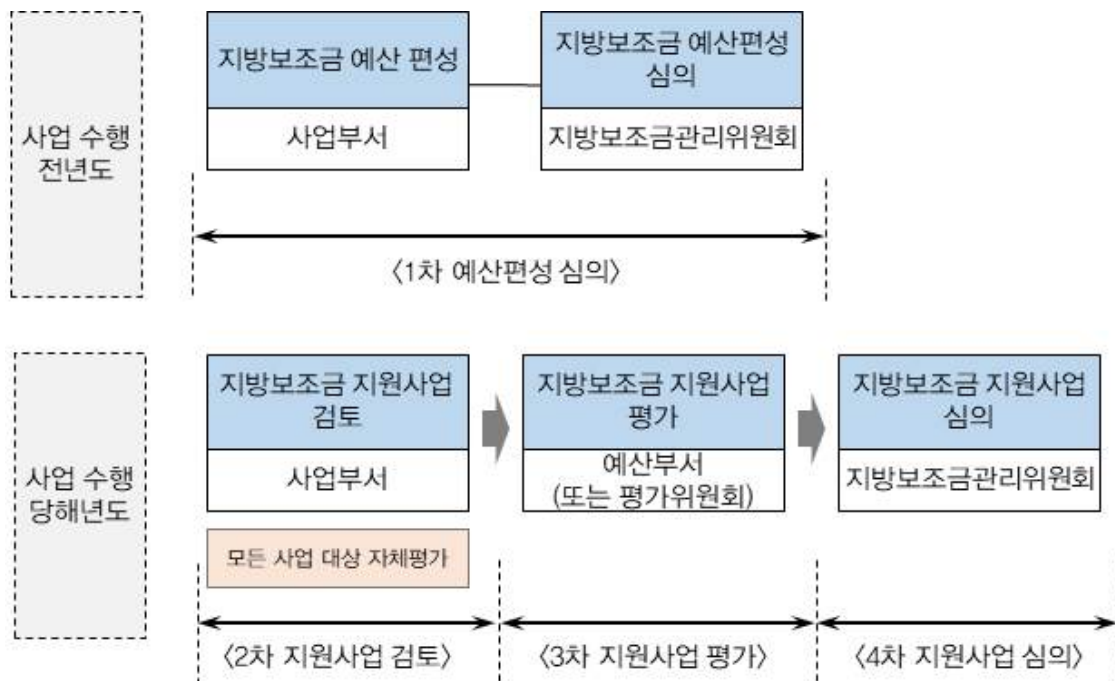
- 지방보조사업은 현재 제도적으로 총액한도제가 운영되고 있고, 부여군 자체적으로 부서(과) 단위로 총액한도제를 운영하고 있음
- 부여군 지방보조금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효과성, 효율성이 높은 사업으로 지방보조사업이 채워지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유사중복된 사업을 배제하고, 비효율적이고 성과가 낮은 사업들을 일몰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행정안전부는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60점 미만)한 경우 예산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
 - (성과평가 미흡 사업) 결과 정도에 따라 지방보조금 최대 50% 삭감
 - (유지 필요성 평가 미흡 사업)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삭감 또는 폐지
 - 집행률 70% 미만인 집행부진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 검토
- 평가결과에서 하위 10%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미흡’을 받도록 상대평가제를 도입
- 유사중복된 사업은 보조금이 지원되지 못하도록 사전차단방식을 적용

1. 사전심사 개선방안

■ 평가대상 확대 및 통합관리 강화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여군 지방보조사업 사전심사의 문제점 중 하나는 보조사업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부서 평가가 실시되고 보조사업 신청서에 대한 평가가 사업부서별로 실시됨에 따라 통합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임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 사전심사의 평가대상을 모든 신청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임
 - 즉, 신청자가 1명인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사업부서가 자체평가를 실시함

- 다음으로 부여군 전체 사업부서의 사전평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업부서별 평가결과에서 하위 10%에 대해서는 예산부서 또는 평가위원회가 심층평가를 실시함
 - 예산부서의 평가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이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심층평가 결과에서 60점 미만일 경우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함



[그림 4-2] 부여군 지방보조사업 사전 평가체계 수정(안)

■ 유사·중복사업을 차단하기 위한 평가지표 개선

- 지방보조사업 신청사업 평가기준에서 유사·중복 여부는 평가점수의 일부가 아니라 사업추진의 전제로 수정함
- 유사·중복사업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임
- 유사·중복 사업으로 판단될 경우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통폐합하도록 함

[표 4-1] 지방보조사업 신청사업 평가기준 수정안

구 분		평가 기준	평가시 착안사항
전제		1. 부서 추진사업, 다른 보조사업과의 유사·중복 여부	■ 폐지 또는 통폐합
세부 평가 항목	사업계획	2. 사업계획의 필요성 및 타당성	정성평가
		■ 사업계획의 필요성	■ 사업의 공익적 필요성 평가
		■ 사업계획의 타당성	■ 사업의 타당성
		3. 사업의 수혜범위	■ 부여군 전역에 사업효과가 미치지 않는 경우 감점
	보조 사업자	4. 사업수행의 전문성	■ 공익사업 수행의 전문성 여부
		5. 공익사업 활동 기간	■ 1년 이내 (평가제외, 자격미달) ■ 2년 이상 대상으로 점수 차등
		6.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 법인이나 단체의 설립목적이 보조사업과 부합하는지 여부
		7. 자부담예산 집행 계획	■ 총사업비 중 자부담 비율 20% 이상에 대해 점수 차등 ■ <u>민간자본사업보조에 대해서는 30%미만시 평가제외, 30% 이상에 대해 점수 차등</u>
	예산편성 적정성	8. 자본적경비(재산형성) 편성 여부	■ 민간자본사업보조 등 자본적경비 편성 가능한 경우를 제외한 과목에서 자본형성적 사업계획이 있는 경우 지원 제외
		9. 선심성경비 또는 과다 편성, 포괄사업비 편성 - 부적절한 과다 편성	■ 선심성 경비 또는 과다편성시 감점 ■ 포괄사업비 편성시 감점
		10. 사업비 중 식비 지출	■ 총사업비 중 식비지출 과대책정시 감점
감점 항목	정산관련	11. 지난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반납 실적	■ 사업완료 2개월 이후 실적보고한 사업자 △5 ■ 최초 반환명령에 따른 반납기한 이후 반납한 사업자 △5

■ 자부담 설정

-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부담율을 30%이상으로 강제하고, 30%미만시에는 평가대상이 되지 못하도록 함
- 지방보조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총당할 경우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보조사업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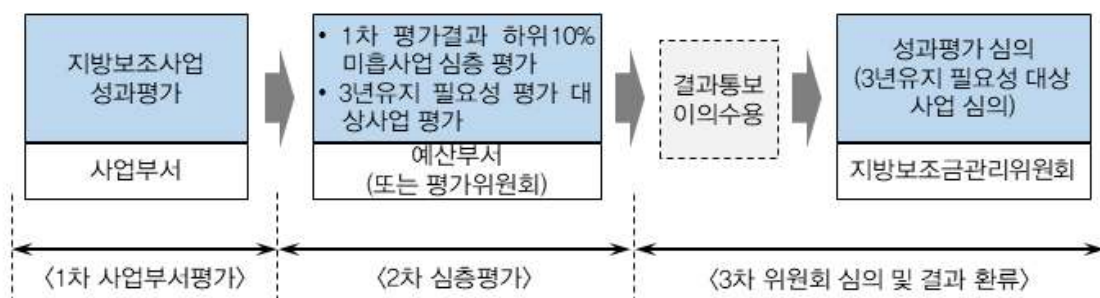
이 많아지게 됨

- 따라서 부여군은 이러한 자부담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국한하지 않고, 추후 지속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중 사업의 효과가 사업주체의 회원이나 집단에 국한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부과하도록 해야 함

2. 사후 성과평가 개선방안

■ 상대평가 적용 및 예산부서의 심층평가 추가

- 현재 부여군은 동일하게 지방보조사업을 사업부서가 평가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그 과정에서 실질적인 사업에 대한 평가는 사업부서가 주도함
- 이러한 평가체계는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예산부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예산부서의 평가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이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기존의 사후 평가체계에서의 사업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우선 사업부서의 지방보조사업 평가시 상대평가를 실시함



[그림 4-3] 부여군 지방보조금 성과평가체계 수정(안)

- 다음으로 사업부서 평가결과 하위 10% 미흡사업과 3년 유지 필요성 평가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부서 또는 평가위원회가 심층평가를 실시함

- 심층평가 결과에서 60점 미만일 경우 사업비를 삭감하거나 일몰하도록 함

3. 행사성 보조사업 관리 강화

■ 행사·축제성 경비에 대한 관리 강화 추세¹⁰⁾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화합, 관광객 유치, 지역홍보 등을 이유로 다양한 행사·축제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그러나 선심성, 낭비성, 중복 행사·축제도 많아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됨
- 무분별한 행사·축제 개최에 따른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
- 행정안전부는 2008년에 처음으로 2007년도 결산기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축제경비 집행 결과를 공개하였고, 2019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재정공시 항목에 행사·축제성경비 편성현황을 추가하여 연도별 현황 및 유사 지방자치단체와의 비교 결과를 제시하도록 함
- 이 외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행사·축제 경비 절감노력을 반영하고 있고, 축제·행사에 대한 사전투자심사,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음

■ 부여군 행사·축제성 사업예산 현황

- 행정안전부에서 집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축제성 경비는 행사운영비(201-03), 행사실비보상금(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401-04)로 구성됨
- 행사·축제성 경비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비교하면 부여군은 2022년 결산 기준으로 13,307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 대비 1.72%에 이룸
- 이러한 금액과 비율은 동종 자치단체에서는 모두 1위에 해당되고,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에서는 금액 기준으로 14위에 해당되고 비율 기준으로

10) 나라살림연구소 홈페이지 나라살림백과 (<http://firiall.net/wiki/222>)

는 3위에 해당됨

- 부여군의 세출결산액이 2022년 세출결산 기준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129위에 해당되는 점을 고려하면, 부여군의 행사·축제성 사업 예산의 규모와 비율은 매우 높은 수치임

■ 행사·축제성 사업 예산에 대한 자체 총액한도제 운영

- 부여군을 기준으로 보면, 이러한 4가지 통계목 중 민간행사사업보조의 예산이 60% 이상을 차지함
- 행사·축제성 사업예산을 효율화하고 절감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행사·축제성 사업예산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민간행사사업보조 예산에 대한 자체 총액한도제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지방보조금 총액한도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는 민간행사사업보조 이외의 지방보조사업 통계목을 줄이고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증가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 때문에 강력한 통제장치가 되지 못할 수 있음
- 그에 반해,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대해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은 해당 예산에 대해서만 통제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
- 울산시는 총액한도제 운영을 통해 행사·축제성 사업예산을 축소함

(우수사례) 낭비성 행사에 대한 평가 및 개선으로 세출예산 절감
(울산시) 울산시는 2017년 행사·축제 예산 254건, 62억이었는데, 2018년에는 320건, 81억으로 30% 증가하여 예산운영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였다. 2018년 행사성 사업의 예산낭비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2017년 행사성 사업 유지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후평가를 실시하였다. 행사·축제성 사업예산에 대해 자체 총액한도제를 운영하여 전년대비 20%(목표 10%)를 축소하였다.

(지방재정365, 2019년 세출절감분야)

제3절 순군비사업 지출 효율화 방안

1. 주요 재정사업평가 활성화

■ 주요 재정사업평가를 통한 미흡한 순군비사업예산 효율화

- 부여군은 2017년 이후 실시되지 않고 있는 주요 재정사업평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순군비사업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재정사업평가제도는 상대평가 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에 평가결과에서 ‘우수’이상 사업비율은 20%이내이고, ‘미흡’이하 사업비율 10%이상으로 나타나게 됨
 - 또한, 투자사업 중 차년도 예산안 반영과 무관한 완료사업의 경우 절대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관대화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구축되어 있음
- 평가결과는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때문에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 ‘우수’ 이상 등급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 증액 또는 유지
 - ‘미흡’ 이하 등급 사업은 ‘예산 10%이상 삭감 원칙’을 적용
 -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의무지출사업, 연도별 지출소요가 확정된 사업 등은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예외 인정 가능
 - ‘매우 미흡’ 등급 사업은 재평가를 통한 등급 개선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예산 미반영
 - ‘보통’ 이상 등급 사업이라도 평가지표의 특성 및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사업 재검토, 통합조정 등 제도개선 권고
 - 예를 들어, 사업목적 불명확 → 사업 재검토 / 유사중복 → 사업 통폐합 또는 연계 강화 / 연례적 집행부진 → 불용실적을 감안한 예산삭감 등
- 주요 재정사업평가의 평가단위는 세부사업이므로 특정 통계목사업을 대상으로 평가가 실시되지는 않음
- 그러나 주요 재정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삭감시 세부사업 내의 비효율적인 통계목사업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평가의 효과성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됨

■ 사전심사 대상사업 확대 및 평가내용 내실화

- 주요 재정사업평가의 사전심사는 신규 행사성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서도 사전심사를 실시하도록 함
- 이는 필요성이 낮거나 비효율적인 사업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 이를 위해 평가 내용에는 필수적으로 세부사업의 유사중복성 및 사업구성 내용의 유사중복성 검토, 사업의 세부구성내용의 타당성, 사업비 세부내역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가 필히 실시되어야 함
- 심사결과 조치는 사업의 차단 외에 사업내용 조정, 사업비 조정 등을 추가함
- 평가주체는 신규 행사성사업과 동일하게 민간위원회가 맡도록 함

[표 4-2] 주요 재정사업평가 사전심사 수정안

구 분	내용	
평가대상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행사성 사업 ■ 신규 투자사업 	
평가내용	사업계획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목적 및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의 명확성 - 성과목표 달성에 대한 부합성 ■ 사업내용의 적정성 및 추진방식의 효율성 ■ 사업비의 적정성 ■ 사업의 유사중복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사업의 유사중복성 심사 - 세부사업 하위 통계목사업 단위의 유사중복성 심사
	성과계획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와 사업목적간 명확한 연계성 ■ 성과지표 목표치의 구체성 및 합리성
심사결과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 사업내용 수정 및 사업예산 변경(사업비 조정) 	

2. 통계목 적합성 평가 및 조정

-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지방보조금에 해당하는 민간이전의 통계목 중 ‘사회복지사업보조’ 사업과 명확한 구분이 어려움¹¹⁾
-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보조사업자의 신청이나 요청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사업집행 후 별도의 평가절차가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상당한 자율성이 보장됨
-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복잡한 행정절차가 요구되는 지방보조금 보다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전환하려는 유인이 발생할 수 있음¹²⁾
-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수단임에도 지방보조금보다 절차적으로 단순하고 평가를 받지 않는다는 특징으로 인해 사회복지사업보조 통계목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사업이 필요 절차와 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사업의 비효율성이 높아지거나 재정낭비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
- 따라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적합한 사업 외에는 사회복지사업보조 통계목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사회복지사업보조는 사업 신청시와 사업 집행 이후 평가를 받게 되고 또한 정산을 거치며, 지방보조사업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업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또한 평가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고 평가항목에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부합 여부를 평가하여 부합하지 않은 경우 사회복지사업보조나 민간경상사업보조 등의 지방보조사업에 해당으로 통계목으로 전환하도록 하여야 함
- 따라서 순군비사업에 대한 평가시 통계목 적합성 평가를 통해 적합하지 않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함

11) 이삼주·윤태섭, 2016: 127

12) 이삼주·윤태섭, 2016: 126

3. 총액한도제 운영

- 순군비사업비의 무분별한 증가를 방지하고 기존 순군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부여군 자체적으로 순군비사업비에 대한 총액한도제를 운영
-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를 제외하고 나머지 순군비사업 통계목(기타보상금, 행사실비지원금, 행사운영비,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해 부여군 총한도를 설정하고 한도 내에서 부서별로 실링(ceiling)을 할당한 후 한도 내에서 순군비사업비를 편성하도록 함

〈순군비 직접사업 총액한도 운영〉

- 한도액 범위내에서 사업별 우선 순위를 감안하여 예산 편성
- 적용대상 : 기타보상금, 행사실비지원금, 행사운영비, 사회보장적 수혜금
- 총액한도 산식
 - 전년도 순군비 직접사업 한도 기준액(총액한도)×(1+최근 3년간 일반회계 결산 기준 자체수입 평균증감율)
 - 다만, 순군비 직접사업 총액한도의 증감율은 전체예산(일반+기타특별회계)의 증감율(편성년도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을 초과하지 못함
- 적용기준 : 일반+기타특별회계
 - ※ 당해 자치단체 최근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결산액의 평균증감률 = 전전년도, 전전전년도, 전전전전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결산액의 전년대비 증감율의 평균
-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은 국고보조재원(301-01) 보조금을 제외한 지방재원 예산임
 - ▶「국제행사의 유차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국제행사, 전국단위 및 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행사(전국체전 등)와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해당 자치단체 부담분, 지자체 매칭펀드사업*지방비 부담분 포함) 등은 제외
 - ▶일자리와 직접 연계된 사업*은 총액한도 대상에서 제외
 - * 단,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서 일자리 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에 한함
 -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수요 등에 대해서는 한도 증액 가능

4. 자부담 적용

- 기타 보상금의 경우 사업의 직접적인 효과가 특정대상에게 한정된 경우가 있음
- 그럼에도 자기 부담금 기준이 없어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 자부담 적용가능성을 검토한 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부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5. 시설비 지출 효율화 방안

■ 시설비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자본지출을 통해 새로운 시설이나 도로, 상하수도 등 사회기반시설을 추가할 경우 이러한 시설에 대한 유지비가 동반됨
- 그에 따라 향후 유지보수적 성격의 사업지출이 상당한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유지보수적 성격의 지출은 필수적 지출이므로 부여군 재정의 경직성을 높이게 되기 때문임
-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우선 기존의 시설에서 발생하게 되는 유지보수적 성격의 지출규모를 파악하여 부여군의 신규가용재원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파악하여 지출의 계획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함
- 한편으로 부서별로 유지보수적 성격의 지출 규모를 파악하여 예산배분시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신규투자사업 추진시 그로 인해 발생하게 될 유지보수적 성격의 지출을 사전에 파악하여 부여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하도록 해야 함

■ 대규모 재정투자사업 추진시 타당성검토 강화

- 대규모투자사업은 시설비를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므로 이에 대

한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대규모투자사업 추진시 타당성검토를 강화하여 사업비 산정의 적절성, 비용효율적인 대안 탐색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필요할 경우 공공연구원의 투자심사지원기능을 활용하여 공사비 산정의 적절성, 적용한 사업방법의 적절성 등에 대한 검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제4절 국·도비사업 지출 효율화 방안

■ 지방재정영향평가 기능 활용 강화

- 국도비사업 추진시 지방재정영향평가를 통해 부여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불필요하거나 사업효과성이 낮음에도 추진되는 사업이 부여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신규가용재원에 대한 분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범위 확대

- 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에 의하면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은 “공모사업 등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임
- 그런데 부여군의 2023년 공모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47개 사업 중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은 5개에 불과하고, 그 중 지방비 부담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은 3개에 불과함
- 부여군의 경우 지방재정영향평가를 통해 불필요한 공모사업을 제한하여 지방비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어려울 수 있음
- 따라서 부여군은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공모사업이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받도록 해야 함

■ 대규모사업 추진시 타당성검토 강화

- 대규모 국도비사업은 부여군 자체재원 소요를 증가시켜 재정운용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함
- 이를 위해 대규모사업 추진시 타당성검토를 강화하여 사업비 산정의 적절성, 비용효율적인 대안 탐색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제도적으로 50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과정에서 타당성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지만, 500억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검토가 의무화되

어 있지 않음

- 부여군은 국도비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500억 미만 사업에 대해서도 타당성검토를 자체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필요할 경우 공공연구원의 투자심사지원기능을 활용하여 공사비 산정의 적절성, 적용한 사업방법의 적절성 등에 대한 검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제5장

정책 제언

1. 지방보조사업 관리에 관한 제언

■ 지방보조금심위원회의 객관적 인사 구성

- 지방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는 보조사업평가의 객관적이고 엄격한 진행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지방보조금심의회 위원 구성시 지방보조사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인사로 구성되는지 확인한 후 최대한 객관적인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해야 함

■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환류체계 강화

- 지방보조금의 성과평가는 그 결과가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음(류민정, 2022)
- 2023년까지 부여군에서는 성과평가 결과를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지 못함
- 향후 평가결과를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평가 환류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내실화

-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을 마련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류민정, 2022)
-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평가항목별 점수부여시, 점수의 근거나 관련자료를 기술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점수를 세분화하면 평가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류민정, 2022), 배점 구간별로 배점범위를 제시하여 평가자가 세부점수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

- 지방보조사업의 평가시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평가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사전심의단계에서 운영비 포함여부 심의가 중요하고, 민간행사사업보조는 사후평가단계에서 행사수혜, 참석범위를 집중 검토할 필요가 있고, 민간자본사업보조은 사전, 사후 심의 단계 모두 중요하므로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여부, 정산 및 성과평가 모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함 (윤태섭 외, 2018: 131)

2. 순군비사업예산 관리에 관한 제언

■ 행사·축제경비 관련 예산 관리 강화

- 행사·축제성 경비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낭비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특히, 부여군의 행사·축제성 경비는 전국적으로 최고 수준이므로 이에 대한 관리를 매우 강화해야 함

■ 주요 재정사업평가제도 활용 강화

- 주요 재정사업평가제도는 순군비사업예산에 대한 유용한 관리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활용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활용과정에서 사업부서의 반대나 부정적 반응이 나타나고 예산부서의 업무 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제도활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즉, 비효율적인 사업을 차단하거나 효율화할 수 있는 수단이므로 지속적 활용을 통해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시설비예산 증대 요인 관리

- 부여군 시설비의 상당 부분은 기존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지출되고 있음

- 사회기반시설이나 주민편의시설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어 향후 유지관리비 목적의 시설비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 시설 확충시 추후 발생할 유지관리비를 면밀히 계산한 후 신규 시설 확충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 대규모사업 추진 또한 시설비 증대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므로, 대규모사업 추진시 경제적 타당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3. 국·도비사업예산 관리에 관한 제언

■ 도비사업에 대한 효율적 관리

- 도비사업은 군비부담률이 높아 부여군 재정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도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유치 전 필요성,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타당성 검토 활용

- 500억 미만 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음
- 전체 사업보다는 주요 사업을 선정하여 타당성검토를 실시하도록 함
- 지역내 공공기관의 타당성검토 전문부서를 활용하면 많은 비용부담을 발생시키지 않고 수행 가능함

연구진

의뢰기관	부여군
수행기관	충남연구원
연구총괄	최응선 연구위원
내부 연구진	김진기 연구위원 이인재 초빙책임연구원 임성수 연구원 안수용 연구원 서경선 연구원
발주기관 주관부서	기획감사실 예산팀